

인권정보자료실
R1.1.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인권하루소식

제2007호 ~ 제2124호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이데 레 보다는 훨씬 앞선 시점
사건 전개되고 있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이데 레 보다는 훨씬 앞선 시점
사건 전개되고 있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이데 레 보다는 훨씬 앞선 시점
사건 전개되고 있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8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2002년 1월 15일
제2007호 ~ 제2024호

인권하루소식

메이론노동자 월계철 3일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서울 노숙농성농민연맹(이하 노숙농민연맹)은 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메이론노동자 월계철 3일까지'라는 제목으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노숙농민연맹은 이날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하며, 노숙농민연맹을 위한 농성농성농민연맹을 실시했다.

2002년 1월

(제2007호 ~ 제2024호)

인권운동연구소 기비 이상원연구원 공개모집

인권운동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인권운동연구소에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공개모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분야: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 2. 모집인원: 1명 3. 모집대상: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이상 4. 모집기간: 2002년 1월 15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5. 모집방법: 이메일 접수 6. 접수처: 인권운동연구소 7. 문의처: 인권운동연구소 8. 기타사항: 인권운동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인권운동연구소에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공개모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운동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인권운동연구소에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공개모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분야: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 2. 모집인원: 1명 3. 모집대상: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이상 4. 모집기간: 2002년 1월 15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5. 모집방법: 이메일 접수 6. 접수처: 인권운동연구소 7. 문의처: 인권운동연구소 8. 기타사항: 인권운동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인권운동연구소에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공개모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8일(화)

제 20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레미콘노동자 날개 펴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차갑게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흰 눈이 내린 7일,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그마한 비닐천막이 외로이 서 있었다. 19일째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바람막이다. 평소 같으면 낮에도 서넛 씩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잠문기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뿐이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왜 사용자들에게 끌려 다니죠?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장 위원장은 입을 뻗었다. 지난 달 22일 검찰이 레미콘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9일엔 서울 고법이 "레미콘 지입차주 등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인간 대접 받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용자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4백 여명을 부당 해고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폭행했어요.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다니..." 집회 참석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더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해 어이없이 구속돼 49일 간 구치소에서 살다 나온 장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연신 내뱉는다.

"법원도 그래요.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사용자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우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저의가 도대체 뭐죠?" 장 위원장은 급년에 선거가 있으니, 현 정부가 사용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스스로 답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대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파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어서, 솔직히 조합원들한테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 위원장은 노조를 만들었던 걸 후회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적자 상태가 아닌데도 사용자들이 운반단을 일방적으로 깎아 버려, 가입하던 보험까지 해약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것,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했던 건 다 노조가 없기 때문이었다. 일부 분회에서나마 △노동조합 인정 △일요일 휴무 △운반단가 인상 등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진 건, 지난 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한 이후의 일이다. "레미콘 운전 일을 14년 간 했는데,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노조 없이 억압받은 걸 생각하면,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노조신고필증도 받고, 노동부 장관까지도 인정한 노동조합인데 여기서 주저했을 순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성 인정받고, 당당하게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레미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짓밟혀 날개 한번 못 펴볼 거예요." 나이 선을 넘긴 장 위원장의 주름진 얼굴을 찬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이주영]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인권운동연구소는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3기 (1월~6월) 세미나 내용 소개

- 1) 현대 진보인권이론(월/화 저녁 7시-9시) : 성적 차이와 인권, 민족(국가)주의와 인권, 인종주의와 인권, 전쟁과 인권, 지적 재산권, 사회권론(계급과 인권, 노동인권 포함), 과학기술과 인권 등 이론 탐색, 주제별 발표
- 2) 사회주의 인권론(수 7시-9시) :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관/ 사회주의 법이념·법체계와 인권/ 소련·중국·북한의 헌법·형법 등의 구조와 인권 현실/ 현실사회주의 몰락 후 맑스주의 내부의 새로운 인권논의 등
- 3) 인권운동동향(수 9시-10시) : 국내외 정세 및 인권운동 동향 토론
- 4) 현대자본주의론(목 7시-9시) : 마르크스의 「자본론 1」 독해/ 현대 자본형태와 운동법칙/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등 이론 탐색
- 5) 현대사 및 국제관계론(금 7시-9시) : 1차대전이후 현대사/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미국패권/ 지역별(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정치·경제상황과 주요 분쟁구도

□ 일정 : 오리엔테이션 : 1월 9일(수) 오후 7시, 개강: 1월 14일(월)

□ 신청 방법 문의: 02-3675-5363(연구소) / 017-679-3550(배경내 연구원)

- 제출서류 :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 하는 일, 참가 세미나명, 참가하게 된 동기, 인권운동경력(단체활동가의 경우) 등을 담은 간략한 자기소개서
- 마감: 1월 9일(수) -방법 : ihrm@sarangbang.or.kr/ 팩스(02-3676-1302)

스소투하동인

올 1 원5005

(호5005권 - 호5005권)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얼마 전 단체에서 회의를 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어떻게 좀 좋게 고쳐볼까 하는 거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 말에서 오는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언어나 단어에 별다른 센스가 없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갔지만 역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름짓는 일이라고 이것저것 얘기가 나온 끝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았다. '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좋고 올바른 가치관단을 하게 만드는 뉘앙스에서 벗어나 60억 개의 서로 다른 양심이 존재하고 자신만의 양심에 '따라' 거부행위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conscientious objection'이란 영어를 풀어서 옮긴 것으로 그 뉘앙스가 일차적 반감을 샀던 모양이었다. 이를테면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이란 말이나?"는 즉각적인 반응이 그것이다. 분명 타당한 지적임에도 나는 오히려 그 지적에 대해 웬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다. 다른 것보다도 군대에 대한 어떤 질문 혹은 문제제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실제로나 온라인 상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거부자=양심적', '군대 가는 사람=비양심'이라는 등식이 '저런 권리도 있었구나'라는 질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군대 갔다온 억울함에서 나오는 보상심리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군대 다녀온 것이 '억울'한 일이고 '아무도 가고 싶어 간 사람이 없는' 일이고 '돈 있고 뻘 있으면 면제받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 다녀온 자신은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므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거나 아니면 거대한 국가적 권위에 굴복한 것이다.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방식을 생각도 못했을 시기에 군대 다녀온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픈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뒤돌아 봤을 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교육하고 가기 싫어도 누구나 가야 한다고 쇠뇌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대 면제시켰던 국가와 그 높은 양반들의 가당찮은 거짓말에 대해 먼저 화가 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나는 이들이 또 하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거부자들 앞에 괜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군대가 좋아서, 군대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집단이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녀왔어. 만약 아직 군에 가지 않은 친구나 후배가 군대에 대해 나에게 상담해 오면 나는 꼭 가야 한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많은 토론이 있는 후 이들이 도저히 군대 가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하면 나는 인정할 수 있어. 사람마다 생각과 신념은 다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도 다른 것이 당연하잖아?"

(최정민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1.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어지려나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군인들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공개(1.4)/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은 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여야 총무회담,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6개월간 유예 합의(1.4)/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대위, '재정통합 1년반 유예반대' 집회 개최(1.7)

3. 의문사진상규명위, 정확화를 향해 한걸음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44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혁신과 의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12.28)/ 규명위, 활동시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12.28)/ 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 교체를 청와대에 공식요청(12.31)

4. 검찰·법원, 레미콘 사용자 장단에 덩달아 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 레미콘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한편, 노동조합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레미콘업체의 노조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12.29)/ 전국건설운송노조,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처리(12.22)에 대해 규탄대회 열어(12.31)

5. 교수계약제 강행 → 대학교육 위기

교수계약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임용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12.31)/ 교수노조, "교수계약제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개정령 반대 성명 발표(1.5)/ 민교협 등 교수7단체,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결성(1.7)

6. 기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공무원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체포(12.26)

◎ 중요 통계

민주노총 집계, 2001년 노동자 구속자 수 241명으로 지난 9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12.29)/ 전국철도노조 집계,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2001년 한해 31명(12.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9일(수)

제 20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

'엑스존', 유해표시 불복...사이트 파업 중

게이 웹공동체 '엑스존'(www.exzone.com)이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이느니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차라리 엑스존을 폐쇄하겠다는 항의행동이다.

엑스존이 말하는 악법이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수간,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다.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은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대해 청소년기를 막 지난 동성애자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 1학년인 동성애자 ㄱ씨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엑스존의 파업 취지에 공감했다. ㄱ씨의 친구인 동성애자 ㄴ씨도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엑스존에 찾아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봤다"며 엑스존 파업을 지지했다.

ㄱ씨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느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고 했다. 이성애자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애에 대해 눈을 뜨듯이, 많은 동성애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ㄴ씨의 설명이다. ㄴ씨도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부터 처음 동성애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ㄴ씨는 "중고등학교 땀 나 자신조차 동성애를 변태적이라 여기고 죄악시했으며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며, 청소년기 내내 너무나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ㄴ씨는 대학 입학 후 동성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서야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지난해 12월 가족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커밍아웃'에 대한 당시 가족들의 충격은 컸지만 지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ㄴ씨가 커밍아웃을 한 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서"였다. '동성친구와 사귀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ㄴ씨의 경우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기부터 겪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동성애를 긍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비단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성애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TV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조언들이 뿔뿔하게 제공되고 있는 반면, 동성애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은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ㄱ씨는, 고등학교 때 구아홈닷컴(www.gooyahome.com) 등에 접속하면서,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ㄴ씨도 엑스존에 종종 들어가 "동성애 커플들도 이성애 커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ㄴ씨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반쪽짜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성애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책과

사이트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를 알고 긍정하는 것만이 반쪽짜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당부다. 한편, 동성애자 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범용)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

지난 해 11월 19일 울산구치소 사망 사건에 이어, 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이 죽었다.

지난 7일 새벽,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33)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8시간 여 만에 사망했다.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조 씨의 부인은 조 씨가 특별히 앓고 있는 병이 없었으며, 4일 오후에 면회를 할 때에도 조 씨에게서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씨의 가족을 면담한 오창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조 씨는 6일 저녁 7시 경 구치소를 나와 안양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진단에 조 씨는 다시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3시 55분에 사망했다. 구치소 의무과장은 "처음 병원으로 이동할 땐 차 속에서 농담을 나눌 정도로 조 씨의 상태가 괜찮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조 씨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사는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며 의무과장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9일 조 씨의 사체를 부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 사할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 해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비싼 약값을 고집하면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협상을 수개월째 끌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6개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강제실시 등 글리벡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에서 글리벡 판매 허가가 난 지난해 6월 이래로 줄곧 한알 당 2만5천원을 고집해 온 노바티스는 11월 19일 정부가 정한 고시가 1만7천862원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글리벡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노바티스에 대한 환자들의 비난이 강해지자 노바티스는 지난 12월 2일부터 기존 백혈병 환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의 약가 재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임시처방일 뿐, 언제 무상공급이 중단될지 몰라 환자들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

99년 4월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 중인 강주성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 많은 환자들이 그 보다 더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억지로 복용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알 당 2만5천원인 글리벡을 복용하는데 드는 한달 약값은 보험비용이 된다 하더라도 90만원~180만원에 이른다. 정부의 고시가 1만7천원도 여전히 비싸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글리벡의 원가는 어느 정도일까? 민중의료연합의 정혜주 씨는 글리벡 특허자료 등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글리벡 한 알의 생산원가는 845원으로 노바티스가 요구한 가격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노바티스가 이처럼 막무가내로 높은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제약회사에 독점권을 주는 의약품 특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TO 협정 하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특허권자에게 개

발 비용을 보상해준다는 명목 하에 20년 간의 독점적 권한을 준다. 여기에 의지해 제약회사들은 원가의 수십배에 이르는 가격을 붙여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대부분의 신약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돼 개발되고, 글리벡도 마찬가지"라며 공적으로 개발된 약품이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유지적재산권모임의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권이 공중보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지난해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도 채택됐다"며 "글리벡을 강제실시해 백혈병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바티스의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이 전액 보험 적용을 받아 환

자들이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바티스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보험 재정 또한 백혈병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내는 돈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가를 고집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0% 운운하는 건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주영]

<해설> 강제실시란?

개발자에게 상당 기간동안 독점권을 주는 특허권의 행사는 때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특허법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선진국들에선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해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든 사례들이 많다. 지난해 8월 브라질에선 보건성이 넬피나비르라는 약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표하자, 특허권을 갖고 있던 제약회사가 스스로 가격을 40% 이상 떨어뜨린 예도 있다.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으나, 7일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 의학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 정보유출 방지 등의 문제를 계속 보완하고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보험증을 사용토록 하

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전자보험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민주연대의 강동진 씨는 전자보험증 도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반겼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관련 규정이 법안에서 삭제됐는데도 복지부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는 전자보험증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보험증 추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담·허위청구를 근절시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0일(목)

제 20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엑스존'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15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 반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www.exzone.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치와 이를 고시한 청소년보호위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엑스존 운영자는 '통신망법' 시행령 제21조 2항 및 3항에 대해 지난해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해 11월 엑스존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엑스존은 이를 거부하며 사이트 파업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교수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97년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20:80의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주변부로 내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은 '누가 청소년 유해매체를 지정하느냐'에 있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1년

반을 싸웠고 6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청소년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쟁기를 바꿨다.

클릭 인권정보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특징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

펴낸 곳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334쪽/ 2001년

장애인특례입학제도(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가 시작된 지 7년째,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전국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모은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34.4%이며,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학교도 46.9% (장로회신학대학교)로 50%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승강기는 64.1%, 접근로는 57.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54.5%였다. 반면, 점자블록은 4.7%,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은 14.7%, 시각·청각장애인에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특징은 장애대학생들이 교육환경에서 피부로 느끼는 '차별'을 구체화해서 측정했다는 점이다. 측정대상에는 편의시설 외에도 학업성취를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비장애대학생 및 교수·강사·조교들의 인식과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장애대학생들은 스스로 대학내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편의시설 개선 운동을 펼쳐나가는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운동 속에서 보고서 작업을 추진했다. 이 운동은 대학 안에서 장애인이 활동과 참여에 제약 받지 않도록 무장애 공간(Barrier Free Zone)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구입 문의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02-765-6835)

서울대,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시설관리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서울대학교(총장 이기준)가 2000년 말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위원장 윤홍림, 아래 시설노조)와 구두로 약속한 정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1일자로 시설관리 노동자 31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에 시설노조 조합원들은 8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96년까지 기능직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나, 학교 측은 경비직감을 명목으로 용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설관리 노동자 3백40여 명 전원이 청원주식회사 등 5~6개의 용역회사에 나누어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매년 대학본부와 용역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인 '시방서'에 의해 고용되어 왔다.

문제는 2002년 시방서에 "(시설관리 노동자의) 연령은 계약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시작했다. 현재 이 조건에서 벗어난 노동자는 모두 31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에 육박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긴 셈이다.

사실 2000년까지는 시방서에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연령제한 조건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봄 시설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43일간의 파업을 벌인 이후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연령제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시설노조 윤홍림 위원장과 대학본부 황지현 시설관리국장 등 노사 5명이 만나 그해 10월경 '2001년부터는 만63세 이하의 노동자와 신규계약하고, 기존 노동자 중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구두합의를 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1년 시방서에는 "2000년도 계약에 의거 현재 근무중인 자 외에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의 연령은 계약만료일 기준 만63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02년 시방서에는 '2000년도 계약에 의거 현재 근무 중인 자'라는 예외조항이 아예 빠져버렸고, 연령제한도 65세로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 7일 새벽 숨진 조모 씨의 사체를 부검하고 1차 소견을 밝혔다. <관련기사 1월 9일자> 조 씨의 부검을 집도한 박해진 의사는 "육안으로 보기에 심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부검의는 "간이 황색으로 변했으며 비장이 보통 사람의 4배 크기로 부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소견에 따르면, 외상의 흔적은 없어 구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보름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검결과로 볼 때, 죽기 전인 6일 조 씨는 매우 위중한 건강상태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조 씨가 처음 고통을 호소한 시각으로 알려진 6일 오전 11시부터 병원에 옮겨진 같은 날 저녁 7시경까지 구치소 쪽이 취한 의료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가 긴급한 치료를 받는데 형집행정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데도, 구치소 쪽이 6일 저녁 서둘러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을 품게 한다. 구치소 측은 6일 저녁 조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같은 날 밤 11시 무렵 서울지검의 허가를 받았다. 몇 시간만에, 그것도 일요일에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심도 교도관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하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씨는 "수감 중이던 사람이 사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구치소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병원비 또한 재소자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 씨의 유족들은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 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들과 담당 의무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주영)

윤 위원장은 "현재, 시설관리국장은 당시 구두약속을 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대학본부의 정책외부에 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조수형 연대사업국장은 "대학본부가 연령제한 지침을 용역회사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령제한 조건은 용역회사와 노동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본부와는 상관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대학본부의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연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범용)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 때 : 1월 16일(수) 오전 10시~17일(목) 오후 5시까지
- 장소 : 예수살이 공동체
- 대상 : 중고등학교 선생님
- 내용 : "유엔아리인 청소년 권리조약" 조항 해설과 교수방법
- 문의 : 02-741-5363 (김영원)

2002 대학생 인권캠프

- 때 : 1월 18일(금) 오전 10시~20일(일) 정오까지
- 장소 : 서울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 내용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인터넷등급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등 인권현안 분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1일(금)

제 20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 앞엔 새 이사진과 교장, 원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이들을 죽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위패가 어지러이 걸려있었고, 옛 재단 측(최성창 씨 일가)이 외부에서 동원한 농아인들 20여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이 5년 여 간의 투쟁 끝에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옛 재단측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아원의 현주소다.

이날 아침 10시 반 정문 앞에선,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 회원들과 이사진, 학교장, 농아원장 등 백여명이 집회를 열고, △옛 재단 인사 완전 퇴진 △학교와 농아원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이 "더이상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다"며 재단 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지역의 민주적 인사와 사회단체들의 비리재단 퇴진 운동에 서울의 인권, 장애인단체들도 가세해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지난 해 3월엔 새로운 교장(김지원)이 부임했고, 8월에 이르러선 전체 이사 11명 중 민주적 인사들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그 징후다. 그러나 교장, 교감, 교사들이 폭행당하고, 교장실 집기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위협이 가해졌다. 업무 중인 교장, 교감들을 교문 밖으로 밀어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옛 재단측이 선동한 농아원생들과 농

아원 직원들이 벌인 일들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충분한 물증이 없다며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평택시청이나 교육청 또한 무책임하게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일 뿐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아 이같은 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파행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신임 원장인 변승일 전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이 대표이사, 교장 등과 함께 농아원을 공식 방문했으나, 아예 교문 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밀려났다. 양봉에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옛 재단 측의 마지막 인물이다. 옛 재단측은 최근 평택시청을 방문해 이사진에 옛 재단측 인사들이 동수로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기

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자신이 농아인이기도 한 신임 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농아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연히 정보에 어두운 농아인들을 선동해 정상화를 가로막는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김용한 이사는 "사회복지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 모두의 것인데, 옛 재단측은 사회복지시설이 마치 사유재산인 양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진과 원장, 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농아원 출입을 시도했으나, 최성창 씨의 교회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농아인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방해했다. 또 이들 농아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가루를 집어던지고, 본지 취재 기자의 수첩을 빼앗아 기록된 부분을 찢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윤귀성 대표이사는 출입을 시도하다 이들이 거칠게 미는 통에 뒤로 넘어

▶ 2면에서 계속

만화사랑방

이동수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지난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 당시 중앙대 총학생회장의 사인이 '실족에 의한 익사'가 아니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가 10일 발표된 가운데, 이내창추모사업회는 같은 날 입장을 발표해 "국정원은 이내창 살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규명위는 당시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이 씨가 단순히 밭을 헐다던 익사한 것이 아니며 거문도에 안기부 여직원인 도모 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아직 이 씨가 타살했는지, 그리고 타살했다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번 중간 발표를 통해 최소한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됐다.

89년 당시 중앙대 2학년으로서 학교 선배였던 이내창 씨의 사건을 충격적으로 접했고, 그 후 이내창 추모사업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정원옥 씨는 이날 발표에 대해 "과거 검찰과 경찰의 사건 수사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선 의의를 찾았다. 이어 정 씨는 "앞으로 국정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확보와 조사가 관건"이라며 "국정원 등은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대협 활동을 했으며, 죽기 바로 며칠 전 걸개그림 사건으로 구속된 이 씨의 선배 차모 씨는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씨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규명위는 조만간 국정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명위

는 이미 한차례 국정원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바 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가 없다"는 회답만을 받았다.

정 씨는 "규명위의 법적인 조사권한이 매우 제한적인데, 지금 상태에서 권력기관이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등 규명위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구치소,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 ... 죽음으로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 문제 노출

10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족과 인권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새벽 사망한 조모 씨의 유족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와 함께 방을 썼던 재소자와 담당교도관들을 면담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다.

우선 재소자들은 조씨가 6일 11시경 의무과로 간 이후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치소 측도 이날 면담 과정에선, 애초에 유족들에게 '조씨가 링겔주사를 맞고 몸이 편찮다고 해, 1시간여 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말한 것을 반복했다.

또한 조 씨는 링겔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이 만난 간병부에 의하면 "조 씨는 11시 경 의무과에 왔고, 20분 후 쏘 도착한 의무관은 12시경 조씨에게 포도당 링겔 주사를 놓고, 1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퇴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조 씨는 두번째 링겔주사를 맞던 6시 40분 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주사를 제거하고 외부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부검결과 드러났듯 심근에 문제가 있고, 비장이 보통 사람의 4배에, 간이 황색으로 변해 있었을 정도로 당시 조 씨는 위독한 상태였는데, 의무관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외부 진료를 서두르지 않고 5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점은 구치소 내 의료 체계의 낙후성을 드러낸다.

한편, 의무과장은 조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었다. (본지 9일자 참조) 그러나 이말 역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재소자 간병부는 휠체어를 탄 조씨를 앰블란스로 옮기던 중 조씨에게 고개를 들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흔들는 정도였다고 한다. 앰블란스를 함께 타고 갔던 담당교도관 역시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조씨를 부르며 입만 병국병국 움직일 뿐이었고 10분도 채 못한 거리부터는 아예 의식이 없었다고 면담과정에서 밝혔다.

평소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던 조씨는 지난 3일부터 의무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 본인은 단순한 감기나 배탈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처방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4일 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앓아 누워있었고 5일부터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한 상태였던 데 비해, 이에 대한 구치소 측의 의료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소자들과 면담을 한 조씨의 형은 "비록 동생이 직접 자신의 병을 몰랐다고 해도, 의무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탄식을 토했다. (김보영)

했다. 나아가 정 씨는 "규명위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 1면 기사 이어짐

어지기도 했다.

한편, 예바다 이사회는 14일 아침 10시 서울 안국동의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같은 날 1시에 는 예바다 농아원 앞에서 '예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2일(토)

제 20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 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지난 해 6월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력, 피해자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고 애초의 진술을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신지체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인의 특성상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며, 특히 '예'와 '아니오' 식의 답변만 강요하는 법정의 위압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9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공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모 양은 이 씨의 '성기 부분에 점이 있다'는 것과 '발가락이 이상하다'는 등 보통 알

기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고법은 "피해자가 ... 다소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인과 같은 수준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도 몰랐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가해자 이모 씨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데는 고법의 유죄 판결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이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남성들에게 수 차례 강간과 성추행을 당해왔다. 이 양의 성폭력 피해 사실은 2000년 8월 처음 밝혀졌고, ▶ 2면에서 계속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흘러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재기지만 공권력이 똥똥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들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금씩 흘리기로 게이트의 게폐 수위를 조절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틀린 명제를 깨는 계기로 삼을 때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허탈과 분노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유명대학을 나오거나 힘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소 시효의 안절피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뺨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비협조에 열리지 않는 과거의 진실, 이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의문사 유가족들, 이 모두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 (처벌불-Impunity)이다.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결코 '권리 위에 잡자는 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불의에 기초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란 것을 규명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때, 어떠한 법률적 구제와 처벌에도 당장 걸리는 시효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공소시효 돌파 문제는 올해 인권운동의 큰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게이트'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가르침이다.

<기고>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전주의 동아자동차운전학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지난 달 19일부터 노조의 김형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3일부터 동조 단식 중인 인권활동가 김영옥 씨의 기고글이다. <편집자 주>

단식 9일째다. 인권단체활동가로서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 단식 해보긴 처음이다. 전북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6명은 지금 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동조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동아자동차운전학원(아래 학원)의 감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전북지역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처음이었다.

감사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하고 월급 1백만원에서 120만원 받는 것이 전부다.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학원은 노조가 생기자마자 지부장을 해고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지노위에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위를 거쳐서' 해고한다. 조합원 15명으로 시작한 노조는 이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 갖은 괴롭힘 등으로 현재 3명만이 노조를 지키고 있다. 노조를 탈퇴한 감사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9일 노조의 김형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부장의 단식투쟁이 열흘을 넘기고 해를 넘겼으나 복직문제를 비롯해서 회사는 교섭해태를 반복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조합원은 3명뿐이고 지부장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부장은 해고자가 되고 노조는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무엇보다 지부장을 비롯해 싸우려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떠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모여 지난 3일부터 우리는 동조단식에 들어가게 됐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노동조합을 갖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3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부장은 지난 7일 단식 20일만에 끝내 탈진해 쓰러졌다. 우리의 동조단식도 9일째가 됐지만 회사는 별 움직임이 없다. 중소기업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시간 끌기 작전 아니던가. 시간만 버티면 노동자들은 지쳐 떨어져 나갈 거라고. 노동자 문제로 싸운다니까 언론도 전부 외면하고 있다.

5일부터 동조단식에 결합한 전국자동차운전학원 노조 공병오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전주에 있는 모 자동차운전학원 감사인데 노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전화를 받은 위원장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에서 우리 투쟁의 희망을 본다.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교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데는 민주노동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근거가 됐다. 5월 23일에 올린 그 글은, 금 씨가 아는 노동자가 지난 2월 24일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것에 대해 "나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반박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글을 근거로 금 씨가 불법 폭력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런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때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이주영]

▶ 1면에서 이어짐

이 양이 지목했던 여러 명의 가해자 중 증거가 뚜렷한 4명의 가해자가 2000년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 중 이 씨와 황모 씨는 이번 판결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장모 씨와 이모 씨는 2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9개의 여성·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 성폭력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위는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말고 장애를 충분히 고려한 진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모 양은 지난 해 1월부터 성폭력 피해자 센터에서 지내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5일(화)
제 20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삼성SDI 노동자 실종 보름째

납치·폭행·회유, 노동운동 씨말리기

사측의 납치와 감금 과정에서 부상 당해 병원치료 중이던 삼성SDI(사장 김순택) 노동자 최모 씨가 지난달 30일 새벽 3시부터 연락이 끊겼다. 삼성은 98년 송수근 씨, 99년 일본연수 중이던 고영선 씨, 2000년 김갑수 등 삼성SDI 노동자 5명 등을 '납치·감금 후 회유'하는 등 노동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다.

최씨가 병상에서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최씨는 삼성SDI 정승용 제조2부장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반강제적으로 밀양 얼음골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했다. 정 부장이 원했던 것은 얼마 전 삼성SDI 울산공장에 뿌려진 유인물과 관련된 정보였다. 그전에 최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 희망퇴직 중단, 사내하청화 반대 유인물을 배포했었다.

삼성SDI 측은 최씨로부터 원하는 정보가 순순히 나오지 않자 장소를 다른 식당으로 옮겨 최씨를 감금하고 심문을 계속했다. 그곳에서 삼성SDI 이창건 노무과장, 차덕준 총무부 직원 등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최씨는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5미터 높이의 남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와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삼성SDI 측은 부상당한 최씨를 곧바로 치료하기는커녕 창녕-현풍-남지-진주 등으로 계속 이동해 23일 새벽 지리산 부근의 어느 모텔에 도착했다. 이동중 최씨는 차덕준 직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생매장시킨다' 등의 온갖 협박과 공갈에 시달렸다. 이후 삼성SDI 측은 최씨에게 유인물 배포 경위서를 작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최씨는 결국 사측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25일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최씨는 4주 진단을 받고 울산 연양의 보랍병원에 입원했고, 27일에는 울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다. 그러나 30일 새벽 3시 회사사람과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것. 이에 대해 삼성SDI 측은 '최씨와 개인적으로 합의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삼성SDI 장모 씨의 경우, 현

재 사측으로부터 해외출장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측으로부터 두 차례 납치, 두 차례 감금,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는 장씨는 98년부터 집중 감시대상이다. 이유는 장씨가 삼성해복투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것.

삼성SDI 김상주 인사부장은 이들과 만나지 않으면 해외출장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노골적으로 회유했다고 장씨는 전했다. [범용]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

14일 의문사규명위 양승규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달 유가족들의 농성 이후, 의문사규명위의 개혁작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인적쇄신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범용]

에바다 진입 좌절, 정상화 차질

14일 에바다 농아원의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진입이 또 좌절돼, 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새 이사의 확충, 지난 3일 새 원장의 부임으로 농아원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는 갖춰졌으나, 옛 재단 측의 방해로 여러 달째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1시 30분 경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 5명과 김지원 교장, 변승일 원장이 정문으로 농아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옛 재단측(최성창 씨 일가)이 동원한 사람들이 농아원을 무단 점거한 채 현 이사진과 임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

옛 재단 측 보모 박미영 씨는 윤 이사의 남심을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

사하기도 했다. 또 농아원 졸업생인 이성준 씨와 농아인협회 회원 20여명이 뒷문을 통해 농아원에 들어갔으나, 양경수 씨 등 옛 재단측 직원과 외부에서 동원한 사람들에 의해 맞고 옷이 찢긴 채 밖으로 밀려나왔다. 현 이사진과 임원들은 오후 4시경까지 교문 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좌절됐다.

한편, 에바다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양봉에 씨가 농아원 안에서 현 이사진과 임원들의 출입방해를 지시하는 장면이 지역신문인 교차로저널의 이철형 기자에 의해 목격됐다. 양 씨는 최 씨 일가 중 유일하게 현직 시설 임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현재 농아원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핵심 인물로서 지목되고 있다. [이주영]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

경찰의 이른바 '체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지난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벌어질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월드컵 대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을 읽다보니 "과격·폭력시위 주동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체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라"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띄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청의 이번 지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중 작년 4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화염병 종합대책 중 "화염병 시위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후에도 사진촬영과 신분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부분이 필자의 머리에 새삼 떠오른다. 당시의 종합대책은 이른바 과격·폭력 시위의 원인을 오로지 집회·시위자에게서만 찾고자 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뒤이어 4월 10일 부평에서 터진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행사건으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스스로 꼬리를 감추면서 그 대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런데 작년 10월 23일에 86개의 단체가 참여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발족하면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불법행위는 체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라"는 식의 경찰청의 지시에 대응할 만한 법리적 검토부분은 빠져있는 듯하다. 지난 해 노동절 집회를 둘러싸고 경찰청과 민주노총 측이 논쟁을 한바탕 벌인 적도 있거니와 경찰 체증팀이 집회현장에 대거 투입되어 집회와 시위의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집회·시위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감시·통제로부터 자유롭다. 경찰이 비디오 등을 집회현장이나 부근에 설치하여 집회와 시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래서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해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촬영을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청은 그냥 두루뭉수리 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체증'활동이라고 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촬영행위를 '표현'하고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촬영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촬영이 가능한 사유, 촬영방식, 촬영자료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집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계수 : 울산대 법학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1. 국정원, '의문사위의 천적'인가?

의문사위, 89년 이대창 의문사 타살가능성 제기... 국정원요원·경찰 등 기관원 10여명 이씨와 동행사실 확인(1.10)/ 의문사위, 국정원 자료협조 계속 거부한 사실 폭로(1.13)/ 의문사위 위원장 사표서 제출, 의문사위 개혁작업에 새전기(1.14)

2. 에바다 정상화, 아직도 그대로야!

변승일 신임원장, 에바다 농아원 방문 거부당해(1.7)/ 에바다 정상화 촉구집회,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 촉구... 에바다 진입시도 실패(1.10)/ 에바다 현 이사진 농아원 진입 또 좌절, 양봉에 전 농아원 직무대행 방해 공작(1.14)

3. 곧 죽을 환자와 농담했다고?

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 발생(1.7)/ 국과수 1차 부검결과 발표, 구타에 의한 사망가능성 희박... 적절한 의료조치 여부 관심(1.9)/ 서울구치소 책임회피 위해 거짓 증언 밝혀져,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글리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리백은 원가의 30배 약가, 정부는 강제실시해야"(1.8)

5. 기락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입... 구두약속 무시당한 채 31명 해고(1.6)/ 민주노총 충남도본부, 지난달 23일 냉장고 및 소형도청기 발견 사실 폭로(1.7)/ 7개 교수단체, '교수계약제 연봉제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허용 입법 추진(1.8)/ 게이캠퍼뮤니티 '엑스존'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 주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1.9)/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 경중... 10대 실업률 5.1%포인트 증가, 20대 실업률 0.4%포인트 증가, 실업자 5만명 증가 총76만2천명(1.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6일(수)

제 20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CCTV 설치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지난해 8월 대용노조가 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단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킹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은 (주)대용이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자진 철거한 바로 다음날.

'회시'에서 노동부는 "CCTV 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CCTV 설치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임의적 교섭사항이란 사용자가 교섭에 임할 의무가 없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노위의 '조정종료'까지 받으며 합법적으로 단행한 대용노조의 파업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신이 난 것은 (주)대용이었다. (주)대용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용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하여 (주)대용은 11월 12일자로

노조원 6명 해고, 5명 징직, 18명 강박, 15명 시달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용노조는 그날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CCTV 설치에 따른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다시 물었다. 하지만 12월 26일자로 대용노조 측에 제차 회신된 노동부의 입장은 이전과 같았다. 대용노조의 합법파업이 사측의 CCTV 자진 철거로 일단락된 후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노사갈등을 다시 악화시킨 것.

이에 대해 대용노조 박재현 사무장은 "이제는 조정종료 결정을 받아 합법적 쟁의행위에 들어가도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판"이라며, 노동

부에 대해 사측편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하지만 노동부 노사조정과 정정식 사무관은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인권이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납득할 수가 없다"며 노동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88년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전주지노위에서 대용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CCTV 철거 문제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용)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람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삼청교육대는 국민을 공포 속에 잡아넣어, 시키는 것만을 무조건 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국민을 세뇌시켜 바보로 만들고, 정부에 감히 도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삼청교육대인 것이다." 김제시에 사는 평범한 농민 나기년 씨가 80년대 삼청교육대에 대해 입을 떼었다. 그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80년 9월부터 8개월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씨는 80년 8월 19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을 받았다. 군사재판에서 나씨는 전주 가톨릭 농민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몇몇 비리사건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사실 등을 심문받았다. 여기서 나씨는 변변한 변론은 물론 죄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가~라 중 '다'급으로 분류되어 강원도 양구 21사단으로 보내졌다. 나씨에 의하면, 이때 재판에선 '가'급이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

"당시 나는 삼청교육대로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삼청교육대는 무법천지였다. 가자마자 앞드려 뺨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시켰다.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멀뚱하게 서 있었더니 내게 구두발이 날아 왔다. 그때 '여기서 이러다가 개죽음 당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나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2면에서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노동권 보장 없이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 노동조합이 △미지급 수당(체불임금)의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 합의의 번복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9개월 간의 단체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결정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등 독단적인 운영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립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 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수당·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6년 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조현민 노조위원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이 없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평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토록 할 뿐 일이 바빠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이었다"고 말했다. 또 임시직 노동자들은 생리 휴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해 7월 이와 관련해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냈고 노동부는 11월 말 경 사측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 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전경숙 노조 전 사무장이 지난 해 10월 말 부당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 씨가 2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도 임금하지 않고 고의로 착복했다는 것이 사측의 해고 이유였다. 반면, 전 씨는 "단체방문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잊고 후에 분실한 것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착복

행위는 결코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11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철회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전 씨가 노조의 간부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주장했다. 부당해고 건에 대한 지노위의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사측에게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열흘의 기한을 주고, 그래도 사측이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내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측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 지난해 11월 8일 노사 양측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로서는 노사 관계가 대치국면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만을 포함시킨 내용이었다. 하지만 12월 19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 강요다. 이를테면, 지난 2일 송영옥 이사장은 시무식에서 노조 활동을 내뱉만을 핑계로 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왜 정립회관이 노동운동권을 쥐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무법인 '현장'의 이우표 노무사는 "정립회관은 회생을 강요하며, 매우 전근대적인 노사 문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적 운영이 보장될 때, 장애인들도 시설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장애인으로서 94년부터 정립회관을 이용해 온 전성신 회원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좀더 투명하게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16일부터 지도부 중심의 파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람〉 1면에서 이어짐

삼청교육대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인권유린이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절대 불가능하며,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른 채 하루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한번은 백내장 치료를 위해 사단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었다. 이때 나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다시 삼청교육대로 복귀하자 충격에 실신을 하기도 했다. 나씨는 81년 4월이 되어서야 제도가 바뀌어 집으로 연락할 수 있었고, 같은달 27일 교육을 마친 당일야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나씨는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줄곧 농사만을 짓고 살아왔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나씨에게 작년부터 간간이 들리는 삼청교육대 관련 소식은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나씨는 삼청교육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의 과거청산 활동이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을 좀더 강력히 밀고 나갔으면 한다. 의문사구명위의 활동기간이 짧던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문사위 위원들에게 좀더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감추 수 있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나씨는 80년 당시 자신을 군사 재판했던 35사단을 상대로 재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것이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씨의 작은 바람이다. (범용)

2002 대학생 인권캠프

- 때 : 1월 18일(금) 오전 10시 ~ 20일(일) 정오까지
- 장소 : 서울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내용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등 인권현안 분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7일(목)

제 20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철도 노동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 수가 1만명당 10명으로 전 산업평균 2.5명에 비해, 무려 4배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도 27일 경인선 백운-동암 구간에서 선로보수작업을 벌이던 현모 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등 3명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인별로는 과로에 따른 지병악화 등 과로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로 및 시설 보수나 점검 등 작업 도중 사망한 경우가 13명, 직무수행이나 행사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6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철도노조는 이같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은 원인을 △무리한 인원 감축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안전시설의 미비에서 찾았다. 김경구 노조 산업안전국장은 "아침 9시 출근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식의 24시간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데다, 기관사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열차 출발 시각에 맞춰 매우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 보니 과로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은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은 "인력이 감축되면서 '철철비'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철비'란 24시간 근무를 한 후에도 교대할 사람이 없어 48시간을 연속해 일하고 하루 비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철도청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96년부터 6년간 5천 55명의 노동자를 감축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선로 보수 분야의 경우에는 6년간 3천56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1천102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열차가 오는지를 감시하는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판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에 대한 실사 없이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추진돼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같은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민주적인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 해 6월부터 강하게 제기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난 해 8월부터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작업 안전 조건에 대해 권한도 없는 말단 관리자들만을 문책할 뿐,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비

관받는 대목이다. 또한 철도청도 산재 사고가 노동자들이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김 산업안전국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16일 아침 11시 노동부와 각 지역 노동사무소 앞에서 △산재 책임자 처벌 △현장 인원 확충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과천 노동부 앞에만 4백여명이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높은 관심을 집작게 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포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현행 산업안전법상 안전규칙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해 온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22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로 상복을 입고 집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개인끼리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입장 소리바다 및 네티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 MP는 상품이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3. 공유적 지적재산권 (http://ip.jinbo.net) IPLeft 선언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
- 자료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죽음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및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정부 내에 전무하다는 데 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조모(32)씨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구치소측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조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료 재소자들은 조씨가 사망하기 3일전부터 허리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 옮겨지기 몇시간 전에도 병세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감기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박모(54)씨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동료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박씨가 지난해 11월 수감될 당시부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였으나 교도관들이 박씨가 '노숙자' 출신이라며 별다른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틀만에 사망한 구모(40)씨 역시 응급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최소한 죽음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과 재소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및 질병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도 행정직은 단 한명에 불과하고 지방교정청 역시 사정이 비슷하여 종합적인 수용자 의료정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각 환자에 대한 치료기제로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방관 역시 허방한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교정시설 내 의료현황 및 조치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 사협회의의 우석균 전문의는 "국가가 재소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라고 비판하면서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정책 마련은 부처간 이해를 떠나 당연한 수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현저한 부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사 1인이 1천2백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실정에서 의료사고는 '벌연적'이다. 여기에 턱없이 낮은 의료예산(재소자 1인당 1년에 3만7천원, 의사월급 포함)은 교정시설이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이유의 하나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 내 장래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영)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수계약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교수단체들의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교수노동조합,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들은 지난 7일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공동본부장 황상의 교수 등, 아래 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15일에는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만나 계약제·연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아래 임용령)이 개정되어, 교수계약제에 따른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개정된 임용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대학교원 계약제 임용시 계약조건은 △근무기간 △급액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등이다.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대학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사실상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업적 및 성과"가 계약조건에 포함됨으로써 대학교원의 노동조건은 전례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 임용령은 대학교수들의 학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기능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기용 교수는 "현재 대학 지배체제는 전부 재단측에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계약제를 인정하더라도 대학의 지배체제를 바꾸기 전에 도입돼선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다. 15일 면담했던 한 부총리도 이러한 문제를 부정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사립 학교법 등을 개정해 대학 지배체제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며 계약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계약제는 연봉제 및 교수평가제와 맞물려 있다. 교수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는 아무도 없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정년보장제가 아예 없으며, 따라서 정년 퇴임 5년 전까지 계속 재임용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박 교수는 교수평가제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제를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이러한 것도 없이 계약제나 연봉제나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혀를 내둘렀다.

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외국 대학과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수에게) 결과물부터 내놓으라 한다"고 한탄했다. 계약제·연봉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교수총원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었다.

투쟁본부는 다음주부터 개강할 때까지 교육부 앞에서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그리고 방학 중 지방순회 간담회를 가지면서 계약제·연봉제 철회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개강 이후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8일(금)

제 20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수지김 가족의 한맺힌 호소

"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

"죽으면 원귀가 돼서라도 이 나라에 해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가던 김옥경(45) 씨는 87년 1월을 떠올리게 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당시의 심경을 털어냈다.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87년 '수지김(김옥분) 피살 및 간첩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김 씨의 가족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15년 세월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겪어야 했던 수모는 '빨갱이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옥경 씨 가족의 고초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남편과 저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안가(安家)로 연행했습니다. 하룻밤의 조사가 끝나고 새벽에 풀러난 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며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물었죠. 말없이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구요." 남편은 '죽을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할 뿐, 지금도 그때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입을 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남편의 흥중은 짐작으로만 헤아릴 뿐이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뿐만 아니라, 김옥경 씨의 남편은 다니던 직장마저도 스스로 그만뒀다고 한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

다. 다행히 김옥경 씨 부부는 가정만큼은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경우는 달랐다. 특히 '빨갱이 집안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는 편견과 독설을 듣고 살던 동생은 결국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둘 이성을 떠나는 가족들이었다. 만연하는 사건 발생 후 회사에서 쫓겨난 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자살했고,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오빠마저도 술로 연명하다 사고로 숨지는 등, 김 씨 가족의 한은 그렇게 쌓여 왔다.

김옥분 씨의 무고함을 믿던 가족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 언론사와 정부청

사를 쫓아다니며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씁쓸하게 돌아오는 시선 속에서 체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을 계승한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까지도 입 한번 열지 못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다시 탄원서를 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남은 가족들은 비로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편편한 장세동에 분통 터트리 "누명을 벗은 것은 시원해요. 하지만 죄를 짓고도 편편한 장세동(당시 안기부장)의 모습을 TV에서 보고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옥경 씨는 언니를 살해한 사람보다도 살인사건을 은닉하고 언니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안기부 책임자들에게 더욱 치를 떨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 (=) 2면으로 이어짐"

만화 사랑방

이동수



〈현장그리기〉 2002 교사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교육, 강연없이 스스로 배운다

교사들 10여명이 3개조로 나뉘어 '학교 세우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4명씩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교육이념도 정하고 교과과정도 짠다. 색색의 크레파스를 동원해 백색전지에 학교건물과 전경을 그리기도 한다.

어떤 학교의 이름은 '더불어 숲속' 학교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이 모두 나무모양이다. 다른 학교의 교육이념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고 더불어 행동하는 자율적 인간"이다. 그 학교의 건물은 나선형으로 교실과 과제실이 모두 곡선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학교는 주위에 과수원도 있고 텃밭도 있고 동물도 키운다. 이 모두를 키우고 가꿀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 이를 위해 '노작교육'이란 수업이 별도로 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

과제수행 후 진행되는 단지 교사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한다. 관련 국제조약과 비교하기도 한다. 3개조 모두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평등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삶'과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이 아동

교육의 목표 중 하나라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내용과 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16~17일 이틀간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 예수살이공동체에서 장소를 빌어 '2002 교사 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샵의 목적은 인권일반론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이해를 도모해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그곳에는 강연이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전문가의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워크샵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 다룬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며 워크샵의 특징을 설명했다. 2000년과 2001년에 있었던 워크샵은 주로 인권과 인권교육의 기본개념에 치중했었다.

광주하남중학교 이겨라 도덕교사는 "그 동안 인권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다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범대학교 다닐 때나 임용고시 준비할 때 인권에 대해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이 교사는 말했다. 또 "체험활동이 많고 진행자는 나중에 나온 말만 정리하는 식의 방법이 참 좋다"며 워크샵에서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방법론에 많은 공감을 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워크샵에도 참가했었는데, 그후 교육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이 교사에게는 지난 학기 효도·경로 사상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 처음 이 교사는 이를 인권적 시각으로 가르쳐 보겠다고 결심했으나, 결국 그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른들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경로·효도 사상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지문날인 반대 워크샵
· 때 : 1월 19일(토) 오후 4시 ~ 20일(일) 오전 11시까지
·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
· 문의 : 윤현식 (011-202-9097)
· 내용 :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 공유 그 동안 활동평가 및 올해 계획

했기 때문. 기존 가치관을 깨면서 인권적 시각을 가르치는 것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듯 워크샵에서 다루는 내용과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많은 과제가 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이러한 워크샵의 한계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법을 제시했다. "인권단체는 워크샵을 통해 교사들에게 보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부족하다. 현장에선 이러한 보편적인 시각을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도안하는 것은 교사 각자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편, 오는 18~20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에서는 '2002 대학생 인권캠프'가 진행된다. (범용)

제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17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조모 씨 등 최근 발생한 2건의 제소자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근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두 건 모두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주영)

<정정합니다>

17일자 기사 '잇따르는 제소자 사망 사건' 중 박모 씨는 '만기출소'한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입니다.

(⇒ 1면 '수지김' 기사에서 이어짐)
하고 발을 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배 제보라'는 식의 당당한 모습은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김옥경 씨는 공소시효 때문에 관련 자들에 대한 처벌이 힘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건가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비롯한 당시 안기부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지김 가족들이 외치는 외마디 호소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19일(토)
제 20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영당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18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의 여성노동자 21명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여성들은 회사의 임원 및 주요 간부들이 신체의 일부를 툭툭 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피해자들이 선별한 4명의 가해자가 행한 성희롱 사례 중 일부.

◎강모 씨 : "피부와 다닐 필요 없어,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이모 씨 : "이놈의 방망이 뉘라"며 엉덩이를 쳤 ◎이모 씨 : 혼자 근무 중인 노동자 옆에 앉아 팔뚝 안쪽을 주물렀음, 근무 중 조기 퇴근하러 술자리에 억지로 데리고 감 ◎김모 씨 : 혼계를 하는 척 하다 아랫배를 때림, 빈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중 손을 만짐, "야! 너 누가 검정색 속옷 입으라고 했어?"

이제껏 여성노동자들은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좀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피해자 중 실제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적으로 노동사무소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 또한 이 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측은 2000년 12월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까지 했으나, 상황은 시정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 사실 회사에 들어 온지 오래 돼서 성희롱에 많이 무뎠던 편이지만, 새로 들어온 여자 후배들은 혼자서 많이 울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싸우면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고, 집단진정이라도 해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 씨는 집단 진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장애인 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연장근로·휴일·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 안되면 대체휴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휴일을 쓰지 못할 때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건, 노동자라면 당연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근기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눈뜨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시 수당 등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투쟁의 결과, 장애인·아동·노인생활시설의 노동시간이 하루 24시간에서 2교대제, 즉 하루 12시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인간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리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물론 적정 인원이 확충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또한 민간법인들은 자 부담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낮은 보조금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해왔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늘 피리표처럼 따라붙는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러한 현실에 지렛대처럼 작용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전근대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렬한 가운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01년 12월 18일자>

처음 오씨는 서울 보문동 노숙자 자활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11일 일손이 더 필요한 서울 미아동 '자비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비의 집에서는 매일 무의탁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결혼기정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한다. 여기서 오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씨는 그 동안 봉사활동을 계속 하면서, 짬짬이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알리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호소했다. 약 70여 분을 만났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개인의 지지가 단체 차원의 지지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논의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쏟아지는 대표적인 질문 한 개를 던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데, 그런 군대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나?" 이에 대해 오씨는 웃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차분히 이야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거부자가 모두 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정한 양심에 충실하려는 사람일 뿐이다. 양심에 따른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군대에 가는 것도 양심이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이다. 이때 양심은, 이 양심은 좋고 저 양심은 나쁘다는 식으로, 가치판단을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씨는 지난 16일 동부경찰서 조사계 박현석 형사로부터 "12일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는 통보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의 집에는 아직까지 소환장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후에 출두문제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의 병역거부를 계기로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해 연대회의를 구성하지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대회의에 18일 현재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실천승가회 등 27개 종교·사회단체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대회의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범용]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 장례 안치려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권모 씨의 유족들이 장례식을 계속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진주총기사건'. <관련기사: 본지 01년 12월 8일자, 20일자> 16일 진주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했으나,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죽은 권씨의 동문단체들과 진주의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겨 놓을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공모자"라고 믿는다며 진주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총탄 발사 수에 대해 총을 쓴 경찰과 수사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사망한 권씨가 경찰을 제압하는 자세를 경찰이 중간에 번복한 점 △최초 현장검증 비디오 테이프를 폐기한 점 등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된 증거를 10가지나 제시했다.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총을 발사한 이모 경사 등 경찰 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현재 이 경사 등은 별다른 징계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작의혹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상이 검찰에 의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용]

◆ 인권영화 보기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가리봉동 하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가리봉동은 좁은 골목과 낮은 지붕 그리고 다닥 다닥 붙어 있는 쪽방과 함께 창백한 얼굴의 '사계'의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전태일의 누이와 형제들이 사라지고 없는 가리봉동은 최근 '꿈'을 찾아 서울까지 와서 고단한 삶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족들로 인해 북적거리고 있다.

2000년 인권영화제에서 인도 비하르 지역의 참상을 고발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제작프로덕션 리포트25는 최근작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에서 이곳 사람들을 집중취재했다. 제작팀은 3개월 동안 가리봉동 사람들과 같이 쪽방살이를 하면서 가리봉동의 변한 모습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변한 것은 단지 저임금 노동자들이 조선족으로 대체된 것이며 여전히 변방의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삶의 고통들.

상대방 부모의 반대 때문에 임신했음에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겨야 하는 조선족 여인,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함께 싸우는 조로의 노동자들, 쪽방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 등이 이 작품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변방의 사람들이다. 23일 밤 12시 KBS 수요기획을 통해 방송되는 이 작품은, 이후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모아 독립영화버전으로 재편집될 것이라고 한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2일(화)

제 20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지난해 11월말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권경현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현장의 천장에서 폭 3cm, 길이 10cm 가량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자국이 총탄 흔치이라고 의심했고, 이에 대해 19일 오전 MBC PD수첩 취재진과 동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직원 역시 탄흔이라고 확인했다.

공대위는 "이것은 이모 경사와 김모 경장에 의해 재연된 현장 장면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탄흔은 이 경사가 사건 당시를 재연하면서 총기를 발사한 방향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공대위는 21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탄흔 발견사실을 전하며, 경찰 측 주장이 조작됐다고 항의했다. 유족에 따르면 수사과장은 "유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흔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흔 발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MBC PD수첩의 한화수 PD는 수사과장이 제기한 탄흔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PD는 "함께 동행해 탄흔을 확인한 사람은 이전에 국과수에서 총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며, "외관상 봤을 때 명백하게 탄흔 자국이었고 구경 지름도 38구경과 똑같았다"고 전했다.

한 PD는 또 "시약테스트 결과 명백

하게 탄흔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흔에서 나타나는 구리성분이 문제의 자국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한 PD의 설명. 그러나 한 PD는 "탄흔 이외에 천장의 다른 부분이나 벽면 등에서는 구리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자국이 탄흔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21일 여러 차례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거부 선언

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 의료보험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심의위의 위원 위촉에 강력 반대한다"며, "보험 가입자와 공익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위촉하고 있다. 그 중엔 민

시도한 끝에 오후 5시 40분경 가까스로 수사과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과장은 "전화가 많이 걸려와 바쁘다"면서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결국 경찰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장하는 발사 각도와 다른 곳에서 발견한 자국이 탄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경찰의 과잉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범용]

간의료보험 도입을 지지하는 김한중 교수, 문옥륜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에는 농협중앙회가 위촉된 반면,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 왔던 참여연대도 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8인씩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 보험료를 결정했던 재정운영위와 달리, 심의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하게 된 반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했던 가입자 대표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에 어떤 인물과 단체가 위촉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가 국민의 편에서 결정될지, 의약계의 편에서 결정될지 판가름나게 된다. [이주영]

◎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며칠 전 어느 유명 영화감독은 신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의 영화에 여성 비하적 장면이 많다고 지적하자, "나는 마마보이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여성을 나쁘게 묘사할 리가 있겠나?"고 정색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어머니(혹은 아내, 누이)와 동일시한다. 심지어 이 영화감독처럼 마마보이를 페미니스트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성의 가족 내 성 역할일 뿐이다. 그것도 남성의 편의에 입각한 성 역할이다. (유관순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이"인가?) 모성과 같은 보살핌의 노동을 찬양하든 비하하든, 어머니의 역할은 인간이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든 사회적 구조, 따라서 정치 제도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상식대로 모성이 본능이라면, 어머니들은 절대로 뱃속의 여아를 살해할 리 없고 한국이 세계 최대의 아날 생산국도 아닐 것이며, 모든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미혼모가 차별 받지 않을 것이다.

모성 본능 혹은 여성=어머니라는 논리는 노동권, 정치 참여 등 사회 생활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박탈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면, 남편에게 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자주 듣는 말은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이다. 그러나 동시에, 폭력 가정에서 탈출하려는 여성에게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느냐"고 비난한다.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 고문과 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엔 이런 비난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가정폭력이라 할지라도 노인학대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지만, 여성은 인간이기 이전에 어머니나 아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에 속하기 어렵다.

여성이 폭력가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도 큰 이유지만, 아내로서 참아야 하는 '도리'가 인간으로서 맞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 시 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이렇게 인권보다 '도리'를 지키며 오랫동안 폭력을 견디다 보면,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살인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살해당한 여성들의 42%는 전현직? 애인, 남편에 의한 것이며, 임신 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원인이다. 미국보다 여성관련법, 복지시설이 훨씬 미비한 한국은?) 그러나 이 경우는 대개 살인이 아니라 아내의 자살이나 과실 치사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당 방위로 가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91년 남00씨 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 "실수(과실치사)"이고, 이에 대한 아내의 자기 방어는 "살인"이 되는 것이다.

(정희진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의 저자)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1. '권리'는 간데없고 '희생'만이 있더라!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조합, △연월차, 휴일, 연장근로, 생리휴가 등 미지급 수당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반복 철회 요구 파업 (1.14~1.16)

2. "사격명령 거부했더니, 중대장 처형 협박"

'노근리' 주둔 참전미군 발포명령 첫 증언... "당신을 쓴 사람은 부르노라는 중대장 전령", "중대장은 사격명령 거부한 나를 처형하겠다고 협박" (1.14) / 노근리학살진상규명대책위 성명, 미 정부에 △노근리 사건 재조사 △노근리 사건 공식사과와 배상 △희생자를 위한 조건없는 추모비 건립 요구 (1.15)

3. 이제는 대학교수도 '계약제 시대'

교수계약제철회 교수투쟁본부, 한완상 교육부총리 만나 계약제·연봉제 철회 요구 (1.15) / 교수7단체,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시한부 농성 돌입 (1.21)

4. 진주 총기사건, 조작의혹 커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로 송치 (1.16) / 유족, 사건 현장 전장서 탄흔 발견 (1.17) / 총기남용방지 공대위, 발견된 탄흔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기자회견... "전장의 탄흔은 경찰의 사전제연 당시 발사된 각도와는 전혀 다르다" (1.21)

5. 기타

전교조 전복지부, 교사 신규임용시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 등 연좌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인 신원진술서' 요구 규탄 성명 (1.14) / 민주노총 등,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규탄 성명 (1.15)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강용주 씨, 당국의 행정 제재로 여권발급 신청 거부당해 (1.15) /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대우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 (1.15) /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 (1.18)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1.16) / 철도노조,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34명... 철도노동자 산재 사망자수는 1만명당 10명으로, 전 산업평균 2.5명에 비해 무려 4배 (1.16) / 세계은행 <이코노믹저널> 1월호, 88~93년의 5년간 전세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2만달러에서 2만4천달러로 증가, 하위 50%의 소득은 1천47달러에서 1천44달러로 감소, 특히 하위 5%의 소득은 2백77달러에서 2백38달러로 감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3일(수)

제 20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년째인 22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외침이 온종일 울렸다.

2002년, 저상버스 도입 원년으로

이날 오전 11시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 혜화로타리에서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는 다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인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이동의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추락참사 직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에 대해 "초기 장애인들만의 투쟁에서 명실상부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올 한해는 반드시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교통부의 책임 떠넘기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19일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이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답신을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4일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우리나라 대중버스 운수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운수정책과)에 협조 요청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한

이에 따라 기자회견 후 김수태 씨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

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의무가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 2면에서 계속)

☞자료 읽기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펴낸 곳 : 삼청교육인권운동연합 / 541쪽 / 2001년/ 문의 : 765-4126

80년대 초에 일어난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화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류됐고, '언론조작'을 통해 삼청교육대가 '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미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삼청5호(불량배 소탕계획)'를 수립한다. 계엄사령부 전 군 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이 발송되고, 8월부터 12월 까지 전국적으로 60,755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들은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 대상자 3,252명은 구속(군사재판에 회부)되고, BC급 39,736명은 군부대 순화교육으로 보내지고, D급 17,717명은 훈방조치 됐다. 백서에 따르면, 이 중 ABC급 대상자 무려 4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제연행·불법감금·강제노역·고문 등 반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5백 여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또 지금껏 희생자들은 삼청교육 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 백서는 20여년 동안 이루어진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피해자 인터뷰, 당시 신문자료 등을 통해 생생한 르포르 제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쩍고, 상여 부쉬

상여를 메고 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지지하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철도민영화 완전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 2시 경 명동성당으로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서울역 광장을 전경 병력으로 에워싸고 행진을 지지했다. 철도노조원들이 상여를 메고 있다는 점이 경찰이 행진을 지지하는 이유였다.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상여는 집회 신고에 없었다.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상여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경을 동원해 길을 막았고, 급기야 전경들은 연단 앞까지 진출해 집회장 안으로 다시 돌아 들어온 상여를 부수고 말았다.

앞서 경찰은 집회 대열이 서울역 광장 안을 한바퀴 돌던 중 철도 공안들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자, 광장 안으로 달려들어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인상 처울본부 복지국장이 머리가 찢어져 다섯 바늘 가량을 꿰맸고, 황정우 조직국장도 눈 위가 찢어져 중앙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한해만 34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은 것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주1일 휴무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두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파 상여를 준비했다.

경찰의 이날 대응과 관련해, 김도형 변호사는 "설사 상여가 집회 신고에서 누락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지지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구나 경찰이 집회장 안에 들어와 상여가 부서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

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지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주영)

무장병력, 군 의문사 유족 감금

김병민 이병 사망사건의 조사를 위해 군 부대를 방문했던 유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여러 시간 무장병력에 둘러싸여 나오지 못하다 22일 아침 풀려났다. 이는 당시 동행했던 천주교인권위 홍기영 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오창래 천주교인권위 조사감시위원장

(=> <장애인의 이동권>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청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된 적극적인 자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권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는 뜻. 같은 이유로 박경석 공동대표는 건설교통부를 차별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절절한 외침, 장애인이동권 확보

오후 1시부터는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가 열린 해화로타리에는 "근조 대중교통", "근조 장애인 이동권"이 적힌 장례식 조화가 열 개 가까이 세워져 있었다. 결의대회 도중에는 대중교통 화형식이 거행되기도 해, 장애인 이동권이 차별받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오후 2시 40분경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 조화가 불법집회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지지했다. 이에 지난해 9차까지 진행된 후 올해 첫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집회 참석자 100여명은 오후 4시 30분 경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집결해,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외쳤다. 예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는 대표 등 2명은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쇠사슬로 온몸을 결박하며 이들의 투쟁에 연대했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중 38명이 종로·중부·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동권연대는 이들 경찰서를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항의방문을 전개했다. 이날의 투쟁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었다. (범용)

등 유족측 23명은 21일 아침 11시 경부터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부대 관계자의 수사 설명을 듣고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후 유족들은 오후 4시 반 경 부대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부대 측은 오전의 수사 설명 때 촬영한 녹화 테이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무장 병력 30여명을 동원해 차 3대를 가로막고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오위원장 등은 "테이프에는 수사 설명 뿐, 부대 측이 우려하는 군 기밀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각서를 써줄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부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후 새벽 2시 경 언론사 기자들이 부대에 당도한 후야 부대 측은 무장을 해제했고, 유족들은 아침 9시 반경 부사단장 등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유족들을 군 부대 안에 감금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새벽 부대에서 1kg가량 떨어진 K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이병 사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4일(목)

제 20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1백여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인 점을 악용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에 있는 가구생산업체 아모르 가구(사장 손남숙)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고, 나이지리아, 카지키스탄 등 10여 나라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의 노동자 1백 여명이 일하고 있다.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다국적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때문이다. 4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필리핀 출신의 노동자 쉰씨는 "지난 해 11월과 12월분의 임금을 못받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이틀간 파업을 한 일이 있다. 쉰씨는 "4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등 판 데는 돈을 쓰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번번이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들은 대개 아침 8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상적인 임금은 기본급 75만원~95만원에 수당이 포함될 경우 100만원~150만원이다.

또한 사측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부터 작업

에 다시 투입하곤 했음을 '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는 권복순 씨가 노동자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출신의 일리아씨는 지난 12월 19일 작업 중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의 한 마디가 잘렸는데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일리아씨의 손가락은 눈으로 보기에 도 피부 조직이 썩고 있는 게 확인될 정도라고 권씨는 말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스킨씨는 지난 12월 14일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뭉그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선 '괜찮다'는 말만 연발하며 4일 후야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한다. 러시아 출신 위탈리씨는

지난 11월 15일 전기나무톱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세로로 심하게 베어 갈라졌는데, 최초 치료만 받게 한 후 마찬가지로 일에 계속 투입해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다. 사측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데다 임금마저 체불돼, 추가 치료가 어려웠던 것이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다.

한편, 사측은 21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기숙사에 전기와 물, 가스 공급을 끊었다고 공공연히 협박했다. 또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장 손씨의 남편은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썩 다 잡아 가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22일 의정부 노동사무소의 박대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자리에서까지 재현됐다.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에 따르면, 박 감독관은 22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조사한 후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주영)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대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천인 선언의 결과를 발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한다. 이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의 이메일 duck52@jinbo.net로 이름과 직업을 보내면 된다. (범용)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연이어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드높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1월 17일자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인권단체는 현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11시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수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이은 사건 모두가 '인재'라는 데 동감을 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상태에 빠져 손발이 썩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정시설의 위생과 환경상태가 사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집단, 과밀 수용에 따른 유행병과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수용자의 유행병이 일반인의 몇 배가 넘는다는 점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에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의료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의견서에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은 물론 △의료예산 및 장비의 확충 △병실사용 및 외부진료의 현실화 △특별 의료교도소 설립 △शल효성 있는 정기검진 실시 △행형법 개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의 일환으로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유해정]

잇따른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때 : 오늘, 2002년 1월 24일 (목) 오전 11시
- 곳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 (병동 가톨릭회관 뒷편)
- 문의 : 인권실천시민연대 (02-749-9004)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아동 체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뜨거운 논쟁거리인가보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체벌은 거의 모든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아동 체벌을 행하는 성인들이 '구타'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랑의 때'라는 표현처럼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아동체벌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동이 체벌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교육적 효과'를 들고 있는 점도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체벌의 옹호자들은 '합리적 체벌'과 '부당한 학대'를 애써 구분 짓고 서로 다르게 정의하려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체벌'과 '아동학대'는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둘을 서로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런 구분은 '때리는 것이 학습에 좋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반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한다. 또 보고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한 10개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정부의 체벌금지 조치가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체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여론을 무시한 조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금지법규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교육과 캠페인을 동반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한결같이 아동체벌을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벌이 인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집단에 속한다. 현실에선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 피고용인, 수인, 군인' 등에 대한 체벌은 분명한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오직 아동만이 체벌이 용인되는 대상인 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이나 인권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체벌에 대한 아동의 다양한 반응을 인용하고 있는데 체벌에 대한 아동의 항변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서는 안돼요 (9살 스코틀랜드 소녀)"라는 말에서 압축적으로 요약된다. 한 조사에서는 아이들이 체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가 40여 가지였는데 "무섭다, 화난다, 아프다, 외롭다, 슬프다, 버려졌다, 짜증난다, 증오스럽다, 불행하다, 창피하다, 가슴이 무너진다, 비참하다" 등 부정적인 것 일색이다. 한 아동은 체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도 체벌을 기억할 것이고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돼요 (12살 바누아투 소녀)"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5일(금)

제 20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 제기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2시경 천주교 인권위 2층 회의실에서 '수지김' 가족들과의 간담회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옥분 씨의 막내 동생 김옥림 씨는 "처음에는 우리 언니가 간첩이 아니기만을 바랬지만 우리만 살다 그만둘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의 시발점에 서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다. 다른 동생 김옥경 씨도 "공소시효 때문에 장세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힘을 달라"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해 참가단체들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예초 이 사건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 대중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보다 형사

소송법상 재심규정과 공소시효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결코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됐다. 공소시효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체계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민변 최준석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기자회견을 열

어려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한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후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동아 2월호에 장세동 씨의 인터뷰 기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수지김' 가족들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 등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면 견딜 장사가 없을 것"이라고 평했으며, 인터뷰한 기자에게는 "수지김 가족이 분수를 넘지 않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이 내용이 '수지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기자회견 후 장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하기로 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영풍그룹 맞서 파업 1백88일 1백7명 집단해고에도 '시그' 투쟁 계속된다

25일 현재 파업 1백88일째를 맞는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 (지회장 정해경, 아래 시그지회) 그러나 시그지회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시그네틱스 서울공장이 폐쇄되면서 시그지회 노동자들은 '파주공장에서 노동하겠다'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인 영풍그룹은 '안산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온 것. <관련기사: 본지 2001년 9월 25일자> 그렇다면 안산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시그지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파주행'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24일 오전 서울공장을 찾아 유희숙 교육부장 등 몇몇 노동자를 만났다. 이들은 정문 근처 경비실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서울공장을 뜻없이 지키고 있었다.

박규현 부상황실장은 안산공장의 현실을 그대로 전했다. "안산공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죠. 생산량도 서울공장의 1/9 정도예요. 그나마 현재는 일부를 임대해 주고 있고, 작년 말부터는 '동양반도체'가 안산공장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산공장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곧바로 정리해고"라는 것이 유 교육부장의 부연설명이었다.

이때 몇 통의 편지가 노조사무실로 배달됐다. "피징계자 000는 인사명령 거부, 불법적인 업무방해, 회사 재물손괴,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유 교육부장은 "지난해 10월 30일 5명이 해고된 이래 현재까지 조합원 1백7명이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1백7명은 현재 투쟁하고 있는 시그지회 조합원의 대다수.

문득 시그지회 노동자들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영풍그룹은 왜 그렇게 반대할까 궁금했다. 현재 파주공장에는 사측의 통제에 저항하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 7백여 명이 모두 용역으로, 영풍그룹은 별다른 저항없이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셈. 이에 대해 안미희 조합원은 "회사는 파주공장에 이제 고등학교를 갖 줄 업한 사람들을 데려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며, "작업장에는 잠시 설 의자조차 없다"고 흥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풍그룹이 시그지회 노동자들을 파주공장으로 받아들이 리 없다. 이들의 파주행은 파주공장의 노조결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바로 노동착취에 대한 저항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이날 오후에도 시그지회 노동자 1백여 명이 '파주행'을 요구하며 영풍본사 앞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거리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환자나 임신부는 서울공장을 지켰다. 서울공장에 있던 유 교육부장도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주공장으로 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함박 웃었다. 전 조합원이 땀뿜 뭉쳐 싸워나가는 모습 속에서, 영풍그룹에 맞선 시그지회의 투쟁이 계속되리라 생각됐다. 서울공장을 나오면서, 유 교육부장의 웃는 얼굴이 눈에 선했다. (범용)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현)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사법경찰관 등에 대해 모두 반대 혹은 삭제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그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청문회를 열고, 이후 추가로 국제인권법학회와 헌법학회의 의견을 들은 과정을 거쳤다. (이주영)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사업주,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

아모르가구의 이주노동자들이 24일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받고 21일부터 진행했던 파업을 끝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4일자>

"파업 중이던 우리들은 24일 2시 경 '사업주가 25일 밀린 임금 두 달 치 전액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고 이란 출신 노동자 알리 씨는 전했다. 노동자들은 25일 임금을 받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의 파업을 지원했던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려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6일(토)

제 20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없다"

호흡기 언제 뻐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무 잘못 없음"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향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이 시기적절한 의료조치만 취했어도 구승우(울산구치소 2001/11/19 사망)씨와 조순원(서울구치소, 1/7 사망)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않았을 것"이라는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무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나 사무관은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 씨의 부인에게 "소생이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라며 "국가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치료비를 낼 수 있습니까? 언제든, 결정하면 그때까지 치료비는 생각해보도록 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의 부인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나"고 묻자 나 사무관은 "뵈지 아시잖아요. 가족이 결정해주세요. 이점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라고 답변하는 등 면담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 인권단체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면담은 결국 한시간만에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으로써 끝이 났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급히 조직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상임의장 등 13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박명원 씨의 가족이 참여했다. (유해정)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모씨에 모든 책임 전가

수지김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전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에 관해 한겨레21 김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실는다. (편 집자주) (→ 2면에서 계속)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온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답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안기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된, 이 파렴치한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장세동과 그 부하들은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의 한계'를 만끽하며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 보라'는 식의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말단 직원이었던 김종호(윤태식 담당자, 수배 중)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작태마저 보인다. 아마도 김종호가 공소시효의 기간을 버텨주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객사라도 해 줄 것을 바라는 심정일 테다.

이 기막힌 현상을 지켜보면서, 유족과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감정'이다. 이미 우리는 이근안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등 과거에 슬하게 같은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실정법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정의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외국 학자의 말과 같이, 불의한 법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법인도피,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5공의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조차 이런 논의를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유족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하며,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혹자들은 '공소시효'를 건드리는 것이 위험 소지가 있고,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법의 안정성은 법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이다. 특별법을 만들든, 일반법을 고치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회복되는 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제2, 제3의 장세동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싶지 않다.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민주노총 등도 참가

브라질의 뽀르토 알레그레 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아래 포럼)'의 시작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인데, 99년 말 시애틀에서부터 그 힘을 과시해 온 세계화 반대운동이 이젠 본격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가 슬로건인 것도 그 이유. '토지가 없는 자들의 운동'을 비롯한 브라질 사회운동과 아팍(시민자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이번 포럼은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이같은 대주제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탕감, 환경, 에이즈, 식량주권, 세계화와 군사주의, 경제·사회적 권리 등 27개의 토론회가 총총히 짜여져 있다. 모든 토론은 자본의 세계화 반대편에서, 인권·사회정의·평화·인민주권에 봉사하는 민주적 세계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지난 해 포럼에 참가했던 박하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사태로

인해 구조조정이 어떻게 제3세계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지가 또렷이 드러나고 있는 이 때, 포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평했다. 또 이번 포럼은 '테러와의 전쟁' 공세로 주춤했던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재기하는 계기를 제공할 거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포럼에 출리는 관심은 매우 높다. 조직위에 등록된 전일 참가자는 1만 9천명으로 지난해 참가자 수의 네 배가 넘는다. 한편, 국내에서는 민주노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등 '국민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 11명이 포럼에 참여한다. 그 중 김희준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제3세계의채거부운동 네트워크인 '주빌리 사우스' 주최의 '제3세계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에 참가해, 한국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증언한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건. 검찰은 1년 7개월여의 수사 후, 지난해 11월13일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윤태식을 수지김 살해혐의로 구소기소했고, 곧이어 단순살인사건을 남북미수사건으로 둔갑시킨 안기부의 조작은폐 내용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태식은 87년 1월 부부싸움 끝에 수지김을 살해했다. 윤씨는 북한대사관을 찾았다 거절당한 후, 미국대사관을 거쳐 한국대사관으로 와서 "납북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안기부의 해외공작국 직원들은 윤씨가 훗날 수사하는 것을 의심해 기자회견을 보류하도록 본부에 건의했고 1월7일 저녁 9시경 현지 기자회견 전면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불과 4시간 뒤인 1월8일 새벽 1시경 "부장의 지시다, 국가정책 판단"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강행지시문이 여러 통 싱가포르에 하달돼 단순 살인범을 반공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윤태식을 서울에 데려와 조사하자마자, 안기부는 곧 윤씨의 거짓말을 알았으나 그냥 덮어버렸다. 13년 뒤 다시 안기부는 진실을 은폐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 2월 경찰의 내사를 눈치채고 이무영 당

시 경찰청장에게 김승일 대공수사국장을 보내 내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 그렇다면 87년과 200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윤씨를 풀어준 뒤부터 계속 밀착 감시했고 91년부터는 출국금지를 시켰다. 그러나 87년 당시 실무 수사관이자 그 뒤로 윤씨를 관리했다는 김아무개(55)씨는 현재 도망친 상태이다. 장세동 전 부장을 비롯해 87년 당시의 조작은폐 책임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모두 업무가 인수인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 내사를 중단시켰던 김승일 전 국장 역시 이 사건을 "캐비닛을 뒤져 찾아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황 상 입을 맞춘 것이 분명한데 이를 반박할 증거와 자료는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사라진 김씨를 잡아야만 안기부가 윤씨를 '관리'한 내용과 실체, 책임선이 드러날 거라고 말한다. 김씨는 98년 국정원을 퇴직한 뒤 이듬해부터 윤씨가 대주주인 패스21의 자회사 이사직에 등재됐고 윤씨에게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수배된 상태다. 그가 안기부의 대표자적으로 윤씨를 관리하기 위해 인연을 이어간 것인지, 윤씨에게 정관계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윤씨의 돈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인지 알 수 없다.

87년 당시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조작은폐에 가담한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해외공작국의 실무자들까지 모두 7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법정에서 서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조작의 최고책임자였던 장세동씨 역시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망 뒤에서 "검찰 수사에서, 기자회견 재지시 전문을 처음 보았다" "안기부는 나머지 속였다" "관계자들이 알아서 처리(검찰로 송치)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87년 1월 안기부의 조작은폐 과정에서 2000년 2월 국정원의 경찰 내사 중단압력 과정까지 13년 동안의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사라진 김씨의 안기부(국정원) 내 '보고라인'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간첩조작은폐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져야 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천형과도 같은 포승줄에 묶여 15년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수지김의 유족들을 정작 죄를 지은 국가기관이 계속 짓밟고 있는 것이다. <바로 고침> 24일자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중 일리아 씨는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요양했고, 위탈리 씨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29일(화)

제 20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의문사규명위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바꿨다. 이는 종래의 제한적 정의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만 진정을 기각하게 하고,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불능이라고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건에 대한 기각을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따라서 의문사가 아니라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참고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 및 계좌추적 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벌칙조항과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검사나 전직 고위관리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어, 조사를 진척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조사기간은 올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 하에서 대부분 사건의 조사기간은 올 3월 내지 4월에 종료되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은 전체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

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다"며 규명위 내 개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해 이후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명위는 지난 14일 양승규 위원장 등이 사퇴서를 제출해 2명이 공석인 상태이며 금주 내로 상임위원 2명이 총원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주영)

알림

29일로 예정됐던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사건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유는 보건복지부의 98년 양지마을 감사자료를 아직 총남 연기군청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레미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건설된 노조를 탄압해 온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유재필 씨에게 지난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 아래 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에게 "유씨에 대한 수상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심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씨를 국민훈장 수상자로 추천한 곳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총괄담당관실 권영석 사무관은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추천한다"며, "큰 하자만 없으면(수상자로) 올린다"고 수상자의 선정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권 사무관은 유씨가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최초 유씨를 추천한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는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중 유 회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담당자도 유씨가 레미콘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결국 유씨가 노조를 탄압하고 불량레미콘 사용·매립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민훈장 수상자 선정과정의 어디에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맹 최명선 선전부장은 "국민훈장 모란장은 당연히 박탈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훈장을 준 셈이 된다"고 평했다. 29일 현재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295 일제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진지회는 파업 335일째를 맞고 있다. (범용)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

이런 저런 일로 낯선 얼굴들을 대하는 자리, 서막한 분위기 녹이기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캐물어 가거나 학연으로 대표되는 출신성분 따지기가 제일이다. 그날도 그랬다. “아무개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단박에 든 느낌은 “아, 같은 대학 나왔구나였다. 어느 때 같으면 ‘아무개 대학을 나오셨나 보죠?’라고 했을 텐데,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라고 물었다니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은 몇 적은 웃음을 지었다.

대학을 나왔다고 ‘출신학교’와 ‘학번’으로 말문 트기는 몸에 밴 습성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의식적으로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학연이 ‘없는’ 사람, 또는 학연이 ‘다른’ 사람과 서슴없이 구별짓기를 하는 이런 행위에 문제를 느낀 것은 부끄럽게도 10여년을 그렇게 행동한 후였다.

몇 년 전 인권교육을 진행하던 자리에서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천부인권인 것 같아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였다. 학벌을 확인한 후 ‘역시나’ 안도하고, ‘그럼 그렇지’ 낙인찍고, ‘의외인 걸’ 당황하며 사람을 평가하던 내 속을 들켜버린 듯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사람 평가가 나 개인의 악취미나 잘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공모’하는데 있다. 공모는 치밀하고도 집요하여, 직장과 결혼 뿐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지배하며, 일상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대다수를 휘두르고 자빠뜨리고 밀어내기에 거리낌이 없다. 거기에는 ‘다른’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쉽게 골라내고 쉽게 배척할 수 있는 편의가 판을 친다.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명제 아닌 명제를 신분증으로 삼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이런 과도하고 부정적인 일반화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사회적인 혜택이나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차별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잣대로서 노골적으로 구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개개인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력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자는 발언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학벌과 학력이 동어처럼 쓰이는 사회이다 보니 ‘손뼉 걸 대야지’, ‘넙넙 걸 넘뵈야지’라는 식의 반응이 넘치고 있다. 이런 반응에선 체념이 아니라 불순함이 느껴진다.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순한 말이다.

학벌이 경제력에 따라 재생산되고 있고, 배타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기능 한다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뿌리깊은 ‘공모’로부터 탈출하여 편견 없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싶다.

(류은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감’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기(1.23) /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1.28)

2. 이주노동자, ‘상습적 체불임금 못 참아!’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며 파업 돌입(1.21~24) / 아모르가구 노동자 파업승리, 체불임금 지급기로 사업주가 약속(1.24)

3. ‘제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인권단체들,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 기자회견... ‘제소자 의료권 확보하라’(1.24) /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제소자 의료권 확보’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무관, “우리는 책임 없다. 관련자 처벌할 생각도 없다.”(1.25)

4. 미국, 반인권 악명 만방에 떨쳐

유럽연합, “아프간 포로 잘못 다루면 대테러 전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상실” 경고... 미국, 항소권 박탈과 사형선고가 가능한 군사재판 준비(1.22) / 미군,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의 지역에서 “모든 피관민 사살” 명령 사실. <비비방송> 밝혀내(1.25) / 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맥팔랜드에 대한 구인장 집행 거부(1.26)

5. 몸동아리 던져 정리해고에 항의

흥국생명 지부장, 정리해고철회·임단협교섭성사 요구 발당외벽 고공농성(1.25) / 대우자판노조, 5개 영업본부 건물 기습 점거 농성(1.25)

6. 기타

군의원사 조사 민간인 23명, 무장병력에 의해 부대 안 감금(1.21~22)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1천인 선언운동’ 전개(1.21~29) / 이통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 상여시위에 경찰 집회장 난입(1.22) /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전달(1.23)

◎ 중요판결 및 통계

미국인구조사국, 미 불법체류 한국인 18만2천명으로 전체 재미동포 중 17% (1.23) / 김대중 집권 후 구속노동자 6백90명, 단병호 위원장 등 수감노동자 46명(1.25) /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망 국가배상 판결(1.22)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30일(수)

제 20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 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사건과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 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유보하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존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다음에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을 벌여온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까지 26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준)’은 오는 2월 4일 발족식을 갖고,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조]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김성환 의장이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날 오전 업무방해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은 후 26일 정오경 풀려났다.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김 의장은 “노동자 구속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평했다. 김 의장은 지난 96년 11월 삼성계열사인 이전전기에서 해고된 후 지금까지 원직복직 투쟁을 계속해 왔다. (범용)

<기고> 주간 ‘평화와인권’ 서미숙 기자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전주교도소(소장 김민희)가 재소자의 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아래 평화와인권)는 29일 교도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평화와인권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 씨가 광주교정협회로 부당처우 사항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자, 교도소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만류시키고 심지어 ‘문제 재소자’로 찍어 불이익을 가했다. 또한 이모 씨는 평화와인권에 서신을 보내려고 했으나 이 또한 교도소 측에 의해 불허됐음을 주장했다고 전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평화와인권은 지난해 11월 21일에도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는 전주교도소 재소자 3명을 면회하고 그들의 제보편지와 집필이 모두 불허됐음을 확인한 후 교도소 측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김승환 대표와 전주교도소장, 이승철 교무과장이 참석한 면담에서, 김 소장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날 집회 후 김민희 소장은 문규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다시 한번 믿어달라. 서신 불허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전주교도소의 폐쇄적인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노동자 또 자살,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이겨

삼성그룹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5일 울산의 한 아산에서 올해 나이 45세인 우진전자(삼성SDI 사내기업) 대표 박모 씨가 음독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삼성 SDI 부산공장의 VFD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우진전자 대표를 맡은 후 자금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자기 부서를 사내기업으로 전화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진전자를 떠맡았다고 한다.

이는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조달)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다. 원래 아웃소싱은 "경쟁력이 없는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남용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와 관련 삼성SDI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수근) 김학권 씨는 "대표 한 사람만 확실히 관리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며, "회사측 입장에서 인사관리가 편해진다"고 또 다른 악용가능성을 지적했다.

IMF 당시 7천8백 명 정도였던 삼성SDI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약 3천5백 명으로 줄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천5백명 정도에 이르며, 우진전자 같은 사내기업만도 4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삼성SDI가 단행했던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했다. 김학권 씨는 "박씨가 자금관계로 고민하면서 '자기 하나만 죽으면 만사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부인 이씨의 말을 대신 전했다. 박씨는 자살하기 며칠 전부터 부인 이씨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23일에는 "내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겠느냐"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SDI 측은 박씨의 자살을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인 이씨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회사에서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다. 김학권 씨도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례식장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유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삼성SDI가 몇몇하다면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1일에는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 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2000년에 희망퇴직 당했던 김모 씨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들은 모두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투신자살 전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삼성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은 구조조정이 몰고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범용]

<자료> 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 신청인 이경수
·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 피고인 이경수
·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은 이와 같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 쪽도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규정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처벌규정은 위 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 한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후략)

2002. 1. 29

서울남부지원 판사 박시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월 31일(목)

제 20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들의 보고를 받은 장세동 씨는 장승옥 해외담당 부국장을 현지에 급파해 조사토록 했으며, "윤태식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 기자회견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강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장세동의 행위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조작과 개입 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용한 간첩조작의 수법 역시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장세동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장 씨에 대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6개 단체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 앞에 공개 사과할 것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즉각 가입할 것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수지김(김옥분) 유족들은 월간 <신동아> 2월호에 실린 장세동씨 인터뷰 기사에서 유족들이 '외부의 사주를 받아 활동'한 것처럼 묘사되는

등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이유로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설> 장세동 기소 가능한가?

우리 형사소송법 상, 장세동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을 적용하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준종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취볼 때, 검찰이 장세동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현행법의 한계에 안주하는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정신을 적극 적용한다면 기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약속과 선언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효율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시효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유엔인권소위의 '인권법과 인도법에 중대한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이창조]

클릭 인권정보자료

For the Record 2000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2000년의 기록 : 유엔인권 시스템)

발행처 : 휴먼라이츠인터넛 www.hri.ca/fortherecord2000

방대한 양의 유엔 문서 중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마치 해변에서 잃어버린 조약돌을 찾는 일과 같다. 휴먼라이츠인터넛은 유엔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시디롬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부는 유엔기구와 운영 메카니즘-나라별·주제별 특별절차, 유엔고등관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면, 나라별 혹은 주제별 분류 항목을 클릭해서 한국이나 종교·양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된다.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자백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 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통인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김위원의 이삿짐을 실은 차가 통인동에 도착했을 때, 김위원은 이삿짐 집 대문 앞에서 '국정원 직원'(아래 직원)이 사진기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위원은 지난해 8월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았던 그 직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김위원은 곧바로 직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며 필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직원은 처음에는 "지나가는 길이었다", "대문과 집을 몇 장 찍었다"고 답하다가, 나중에는 김위원과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결국 필름을 지웠다.

이어서 김위원은 불법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직원은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담당했다.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위원은, 범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사진을 찍으며 사찰하는 국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김위원은 '직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하며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직원을 인근 육인 파출소로 끌고 갔다. 그리고 "불법 민간사찰을 하고 있던 현행범을 잡아왔다"며, 파출소 경찰들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국정원은 경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등, "파출소는 방법과 교통업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지지 말라"는 등 오히려 직원을 비호했다.

김위원과 경찰들간의 교성이 40분 정도 오가는 과정에서, 직원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쳐 버렸다. 경찰 비호 아래 직원이 도망치는 바람에 제대로 확보된 증거가 없어, 현재 김위원은 국정원의 사찰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고 못하고 있다.

현 국정원법 제3조 1항 3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민간사찰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승교 변호사는 "이 조항들은 보다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모든 국민에 대해 사찰을 해도 '수사를 위한 조사'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김위원은)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김위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범용)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지,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7백에서 8백명 전후의 장애아동이 해외 입양되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기에 보건복지부는 신년계획에서 밝혔듯이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이겠다'는 취지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장애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정부의 계획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의 신지연씨(36)는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를 받는데 한 아이당 월 40만원이 들고 의료비용이 월 5만원 정도 든다"고 말한다. 의료비의 경우 자주 걸리는 폐렴치료를 위한 입원비나 큰 수술비는 제외한 것이다.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는 아이들이 성장해도 계속돼야 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신씨는 8살, 10살 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차례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 한채 값 날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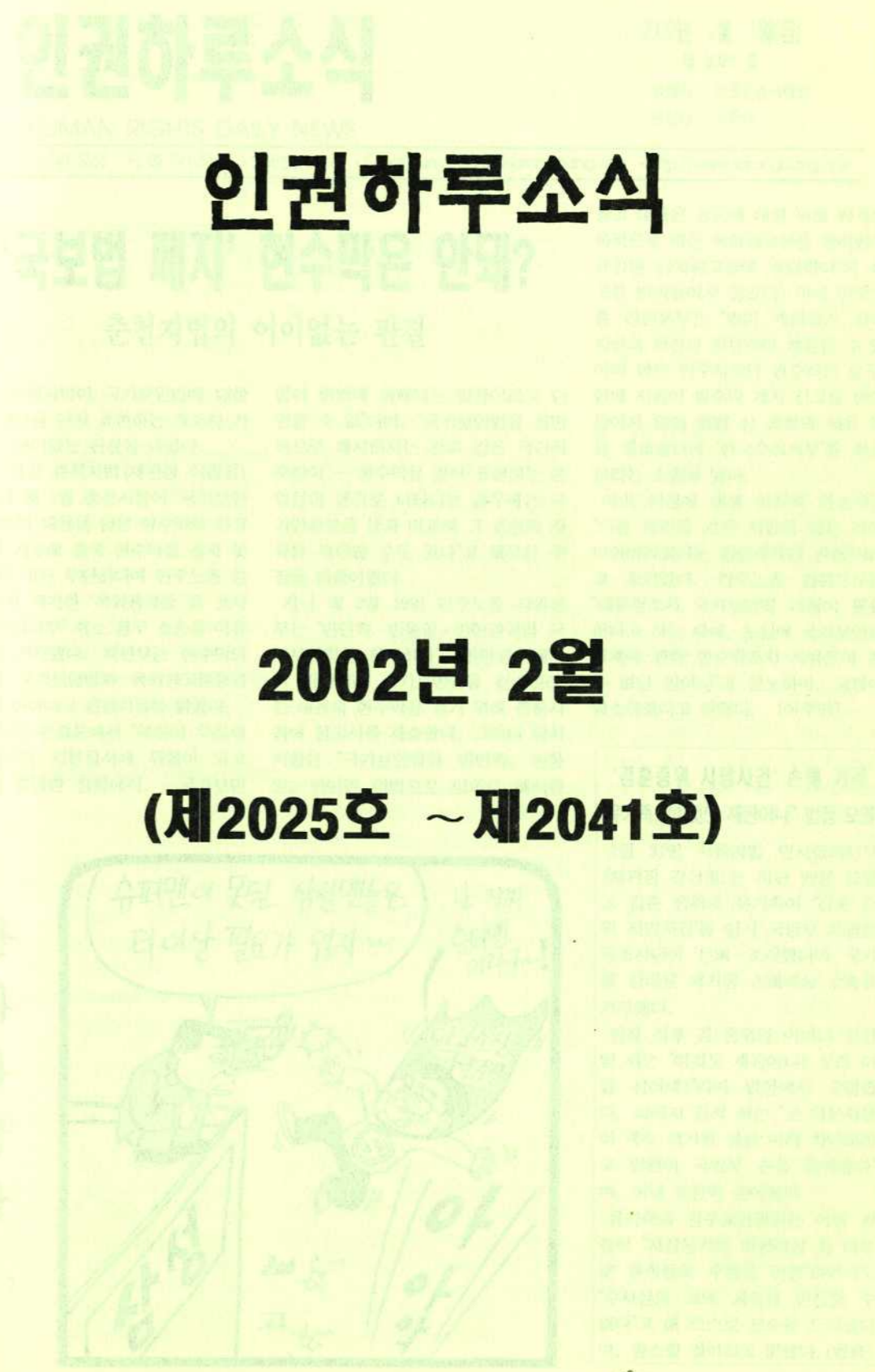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보호수당, 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씨처럼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는 먼 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이고 아동의 장애등급이 1급일 경우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반가족보다 평균 12만 8천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장애아동정책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장애아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정해체와 버려지는 장애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양가정 지원에 앞서 장애아동이 가정환경을 상실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김보영)

<알림> '고(故) 김훈중위 사망사건' 선고공판

○때: 1월 31일 아침 10시 ○곳: 서울지법 민사 562호
김훈 중위는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 후 죽음의 진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 진행돼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1일(금)

제 20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단지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현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의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반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임의로 해석한

광고 내용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법이 개폐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어야 함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요구”인데 시청이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헌법 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신고수리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의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도심에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현수막조차 자유로이 걸 수 없단 말이나”고 분노하며,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김훈중위 사망사건’ 손해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나” 법정 오열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나?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이달의 인권 (2002년 1월)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뽀뽀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깸' 유가족들은 '수지깸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 (1.6), 인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1.30) 한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수사기관의 은폐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 (1.7) 부검 결과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1.9) 유족들은 자체 조사과정에서 조씨가 링겔 주사를 맞은 것 외에 별다른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1.10) 한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 사망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며 (1.17), 13개 인권단체들은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권을 확보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24)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사회단체들은 병역거부권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19~)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 독 박시환 판사는 입영기피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병역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1.29) 이에 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박 판사의 위헌제청 결정을 환영했다. (1.29)

4. 차별행위, 더 이상 묵과 못한다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해당 정부부처와 사용주의 차별행위에 운몸으로 저항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가 게이 웹 커뮤니티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고시한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1.22) 한편,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아모르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해 파업을 벌여 (1.21~24), 결국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 (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28)

논평

-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1.12)
-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거법 적용하라 (1.19)
- 수지깸 사건과 국가의 책임 (1.26)

인권이야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1.8/최정민)
- 경찰의 이른바 '체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1.16/이계수)
-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1.22/정희진)
-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 (1.29/류은숙)

인권정보자료

- 무장애대학 만들기 실태보고서 (1.10)
-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1.17)
- 2001 삼정교육대 백서(상) (1.23)
- For the Record 2000: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1.31)

인권영화 보기

-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 (1.19)

기고

-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1.12/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 수지깸 사건 관련 73명 조사 (1.26/한겨레21 김소희)
-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1.30/주간 '평화와인권' 서미숙)

중요판결 및 소송

-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8)
- 서울지법, 매항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 (1.9)
-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 매카시 상병에 2억3천만원 배상판결 (1.16)
-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망 국가배상 판결 (1.22)
-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해 소송 기각 (1.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일(토)

제 20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글리백, 국내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지난달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약가인하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노바티스는 당초 요구한 글리백 1캡슐 당 2만5천5원을 고수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1만7천8백62원도 수용하지 않았다.

9개 의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백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과 관련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의약품 강제실시권은 특허를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며, "글리백 강제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는 강제실시권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받아들인다면, 특허에 의해 노바티스가 독

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글리백을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노바티스 측은 "강제실시 청원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WTO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바티스의 홍보대행사 에델만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TRIPs 협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청구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글리백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에 강제실시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발명진흥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강제실시권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범용)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의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시설의 서비스 및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가 있고, 관계당국에는 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불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이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면, 즉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그것의 주원인인 시설의 폐쇄성을 조장한 데에는 복지부의 임무방기가 컸다. 양지마을, 예바다 등 충격적인 시설 문제가 폭도될 때마다 정기적 심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이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이 드러났었다. 뿐만 아니라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위의 방문조사는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의 정기적 심사를 독려하고 보충하는 성질의 것이지, 배척될 대상이 아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꺼리는 것은 복지부만이 아니다. 시설운영자 일부도 관련 공청회에서 '열악한 현실에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괜한 의심을 사게 불쾌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만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기적이고 적절한 심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좋은 일'이 봉착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심사 자체를 불쾌히 여기거나 달갑지 않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관계당국의 정기적인 심사나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는 시설생활인들이 사회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실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를 환영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2년마다 의제로 오르게 되는데,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논의되는 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발제문은 공식문서로 채택돼 인권위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는 77호 결의안을, 2000년에는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34호 결의안을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인권위 회원국으로서 결의안들을 채택하는데 동참한 바 있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약 1천6백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인권위 회원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할 의무를 지닌다"며 "국제사회에 우리 실정을 알려 정부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제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영]

☆올림

겨울에서 겨울로

제작 창작집단 소동/연출 박옥순/60분/2001년

세상에는 두겹 세겹의 악조건에 둘러싸인 소수자들이 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여성장애인인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기보조원, 청소미화원, 식당조리사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특히 그렇다. 지난해 독립프로덕션 소동이 제작한 <겨울에서 겨울로>는 가파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경기보조원들에게 카메라의 렌즈를 고정시켰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한성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원들. 이들은 지난 2000년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사측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작품은 한성CC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의 폭행과 감금, 해고에 맞서 싸우는 261일 동안의 투쟁일지다.

노조에 대한 사측의 악속불이행, 경멸과 폭언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우리의 공분을 사게 한다면, 후반부를 차지하는 것은 정규직 조합원과의 갈등이다. 경기보조원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통합된 후 드러나는 갈등을 지켜보면서 이들 경기보조원들이 찾아야 하는 권리들이 얼마나 많고도 힘겨운가를 반성적으로 지켜보게 한다. 빼앗긴 권리가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악조건에 둘러싸인 소수자들이며 이들의 권리 찾기는 험준한 산행처럼 장시간을 소요해야 하며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 소동에서 비디오로 만들어 직접 배급하고 있다. 문의 (02-734-5022) e-mail:sodong@jinbo.net [김정아]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차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박명원(54) 씨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쾡한 두 눈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천장에서 떠날 줄 몰랐고, 동상에 걸린 발은 발가락부터 조금씩 썩어들어 간 상태였다. 1일로 뇌사상태에 빠진지 24일째.

"무의식 중이라도 움직이면 안된다"고 저렇게 침대에다가 양손을 묶어두고, 수요일엔가 산소호흡기를 뺐는데, 의사는 여전히 소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네" 가끔 들리는 가래 섞인 거친 숨소리에서 남편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부인 임영화(49)씨.

임 씨가 2년 전 집을 나갔던 남편의 소식을 전해들은 건 지난 6일의 일이었다. 아들이 울먹이며 아빠가 병원에 있다고, 숨도 안 쉰다고 연락을 해온 것. 그 길로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던 호떡좌판을 내팽개치고 아주대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이 핸드폰을 훔쳐 감옥에 가게되고 그도 모자라 징역살이 두 달여 만에 처자식도 못 알아보는 반송장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처음엔 교도관 양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지. 사람 아프다고 병원에다 데려다 준 게 고마워서. 근데 그거 아니더만. 함께 있던 재소자들이 그러는데 구치소에서 침부터 혼자 앉았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릴 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 약도 안주고 피부약만 줬다? 사람 잡은 게 아니고 뭐요" 흥분된 임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구치소 측은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책임이 없다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했다. 법무부는 한술 더 떠 '소생 불가능한 사람에겐 마냥 치료비를 대줄 순 없다'며 치료비를 받고 싶다면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어제 5백여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독촉에 방을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임 씨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의 사과는 물론 남편의 병원비 역시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5일(화)

제 20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 제정 촉구

"학살의 그늘 반 백년, 살아남은 자들은 입도 뿔긋 못하고 살아왔다. 이 유 없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살아왔다. 이러한 야만의 땅에서 어떻게 감히 인권을 논하며, 진실과 정의와 역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근 영국 BBC방송의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 전후 모든 민간인 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범국민위는 "최근 방영된 BBC방송의 다큐멘터리 <다 죽여버려>는 노근리를 비롯한 수많은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민간인 학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잘못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범국민위의 김동춘 사무처장은 "BBC 방송이 이번엔 공개한 내용은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수많은 학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을 주체적으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미군에 의한 집단학살은 한반도 남쪽 땅에서만도 60여곳이 넘는다. 또 미군의 지휘 하에 있던 한국군 혹은 경찰이나 우익단체에 의한 민간인학살도 경북문경, 전남 함평, 경기도 고양, 경북 철곡 등 무수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범국민위의

신혜영 간사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한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민간인 학살의 실체가 더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양국 정부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민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을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은 지난 해 9월 6일 김원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최소한 2월내에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위 소속 한 의원의 관계자는 "우리 국군의 문제 때문에 민감하니까 미루자고 얘기가 돼서 지난해에 다루지 못했다"며 오는 25일에는 행정자치위 안전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아래 연대회의)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대회의에는 29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김진균 서울대 교수, 효림 스님, 송두환 민변 회장,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교회 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이달 18일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도 3월중으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국회나 정부 쪽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한 차례 밝혔을 뿐, 최근까지 '외면'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공식 논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때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도 '바른 정치입장'을 이유로 이 사안의 쟁점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조]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 아... 대한민국!

2000년 9월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딸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는 유족들, 서럽다 서러웠던 화재 현장에서 노제, 연고도 없이 쓸쓸히 마지막 가는 길을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성매매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하고 또 기원했었다. 그러나...

1월 29일 군산시 개북동 매매춘 업소에서 불이나 12명이 숨지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놀라움은 이번 사건이 지난 대명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상태의 노예매춘과 그것을 묵인해준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 이번에는 어떻게든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자 제대로 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감금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찾은 여성단체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질문에 군산 소방서는 경찰서에 경찰서는 시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유종근 전북지사가 "발표를 확정적으로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명동 참사를 기억해 보라. 무엇이 바뀌었고 누가 대가를 치렀는가. 무엇 하나 변한 것은 없고 포주는 포주대로 관련 공무원과 경찰은 경찰대로 소나기 피하듯 그 시기만 비껴갔을 뿐이다. 제대로 된 사건의 수사과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의 이와 같은 아픔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명동 사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과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감금을 일삼는 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은 매매춘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근본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 대명동 사건 이후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온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그녀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새처럼 훨훨 날고 싶었던 그녀들을 누가 철창 아래 가뒀는지, 누가 이것을 묵인했으며 심지어 성상남 등의 이익을 챙겼는지, 누가 몇 천 만원의 빚에 눌러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누가 시가 몇 억대의 호화주택을 소유한 부자인지. 결국 누가 죽음에 이르렀는지... 또 남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최정민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주간인권호름 (2002년 1월 29일 ~ 2월 4일)

1. 미국은 학전의 중심축! ...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 (1.29) → 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독일 (1.30)·영국 (1.31) 부시 발언 우려 표명/ 부시, "북한 등에 대해 모든 대안 검토" 협박성 발언...북한, 이는 "사실상 '선전포고'" (2.1)/ 국제안보회의, 중·러 등 각국 부시 발언 비판 (2.2)/ 세계사회포럼, 부시 발언 비난 결의안 채택 (2.2)

2. 군산 참사, 또 감금 매매춘?
군산 개북동 유혹업소 화재, 12명 참사 (1.29)/ 군산, 철문 감금장치 의혹 제기...여종업원 메모 공개, "자유가 있다면 영화도 보고 싶고..." (1.30)/ 군산경찰서, "여종업원들이 감금상태였거나 최소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2.1)

3. 진상규명·과거청산의 목소리 불꽃 터져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보상금 신청 기각, 명예회복도 보류 (1.28) → 유족, 보상금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 청구 (1.29)/ 인권단체, '수지갑 조작사건' 혐의 장세동 전 안기부장 고발 (1.30)/ 영국 BBC, 한국전 당시 미군범죄 다룬 '다 죽여버려' 방영...'명령에 따른 계획적 학살' 폭로 (2.1)/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2.4)/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특별법 제정 독립군 발대식 (2.4)

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논의 불붙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결정 (1.2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연대회의 발족...각계 1천5백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선언 (2.4)

5. 기타
영화인, 스크린쿼터 축소음모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 (1.28)/ 동국대,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보류 (1.29)/ 국무회의, 국가인권위 자체정원 180명 과건공무원 포함 2백15명으로 확정 (1.30)/ 보건 의료단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사권 청구 (1.30)/ 대우자동차노조, 대우본사 점거농성...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1.3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공투본, 제2차 결의대회 (2.3)/ 2회 세계사회포럼,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분배, 부의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 권력과 새 사회의 윤리 논의 (1.3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 (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줘야" (2.1~2)/ 한국개발연구원, 98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2.9%로 공교육비의 3배에 해당 (2.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6일(수)
제 20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흑자경영에도 3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오는 7일 대우자동차판매(주) (아래 대우자판) 노동자 3백93명의 정리해고가 예정된 가운데, 임금체계 계약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아침 11시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자동차판매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판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공대위의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앞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민변, 민중연대가 주축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 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년 간 경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적법한 정리해고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우자판 노동자들은 5일로 총파업 57일째, 대우자판 사장실 점거 농성 6 일째를 맞았다. 지난 해 12월 11일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임금체계 변경과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대우자판 노조 박민 정책기획실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해 10월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근속 연수 10년 된 노동자의 고정급을 애초보다 1/4 가량 줄어든 43만원을 제시했다. 이걸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배제한 채 노동자들에 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월 7일 사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 (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2000년에는 5백90억, 2001년 2백40억 원의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했고, 직영영업점이 적자라고 하지만 그건 '대리점이 본사에 주고 남는 자신의 이익금을 경쟁적으로 줄여 판매실적을 올리게 하는 영업 전략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그걸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실장은 GM의 구조조정요구가 정리해고 강행의 원래 이유라고 말했다. 그간 GM 측은 대우자판과 총판 계약을 추진하면서, 판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직영점에 대한 걸끄러움을 표시해 왔음이 지난 연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직영점의 노동자들에 대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리해고 해, 직영점을 없애고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시키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대리점 체제로 완전 전환될 경우, 사측은 영업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달 초 현대차 영업사원이 고객과 영업소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된 사건에 대해 현대차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계약직 사원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박 실장은 현대차 대리점 계약직 사원의 사례는 회사의 방침이 강행될 경우 대우자판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씩씩히 말했다. [이주영]

책 읽기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인 정보집』

펴낸곳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1년 / 658쪽 / 문의 : 02-521-5364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복지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안내서가 나왔다. 이 책은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문답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풍부한 장애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 책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원을 분야별로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 동안 양적으로 늘어난 장애인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질적 선택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애주기별 장애복지와 관련된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다. △유아·아동기 (교육/재활) △청소년기 (성교육/대입특별전형) △청년기 (직업훈련/결혼과 성생활) △장년기 (소득보장/생활서비스) △노년기 (노인특별대책/요양·양로 시설) △전생애 (보장구/의료/여성장애우/접근권/정보화) (최은아)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등이 이번 토론회가 준비된 배경이다. 이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된 쟁점을 정리했다.

논점 1.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장완의 변호사(수지김 유족 민사소송 대리인)는 98년 국제사실형사재판소 설립과 관련해 마련된 '로마규약'의 '반인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반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논점 2.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1995년 5·18특별법 제정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5명)가 '위헌' 견해를 밝혔던 사실에 비추볼 때,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결

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증거인멸 등 형사소추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알리바이의 증명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지김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인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인용) "소급효금지원칙은 국가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권력의 담지자는 이 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반야 아드레아스 벨케)

논점 3.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 방안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박찬운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의 제정이 절경"이라며,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아예 '배제'시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살인죄 등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함승희 의원은 "반인도적 범죄라는 추상적, 포괄적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난관"이라며, 특별법 입안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론했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개정 등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조국 교수는 "특별법에 의해 과거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미래를 내다볼 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완의 변호사는 "반민족행위처벌을 규정했던 제헌헌법과 같이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조)

글리백 투쟁, "이윤보다 생명" 한국노바티스 앞, 강제실시 촉구대회

글리백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백혈병 환자와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에 대한 강제실시권 청구에 이어, 5일에는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백혈병 환자 비대위 강주성 대표는 "백혈병 환자의 80%에 해당하는 만성기 환자에게 대해 보험적용이 안되며, 약값이 너무 높아 환자들이 사먹을 수가 없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약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23살된 딸의 치료를 늦추다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급속히 악화되는 걸 지켜보게 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했다. 백혈병 환자는 만성기에서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진행된 후 결국 사망에 이른다.

사회보험노조 최재기 부위원장은 한국노바티스를 향해 "강제실시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강제실시까지 가지 않으려면 환자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인순 부회장은 성명에서 "노바티스는 거둬들이는 요구에도 글리백의 연구개발 비용도 생산원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약값 2만5천5만원 주장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장 주위에는 "한국GDP는 미국의 1/4, 글리백 약값은 3백만원으로 동일", "노바티스 배가 이윤으로 터질 동안 백혈병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피켓이 즐비했다. '안티-노바티스'라는 대형 종이현수막도 눈에 확 띄었다. 노바티스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홍보대행사 에델만코리아 측은 "글리백은 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돼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 작년에 승인받았다"며, "연구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7일(목)
제 20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영화 <주민등록증을 찾아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는 경찰청을 상대로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같은 달 11일 공개거부처분을 내렸으며, 이씨는 곧바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형의실효 등에관한법률(아래 법)을 근거로 이씨의 수사자료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법 제6조 1항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사자료표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이는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교사는 학생들을 장애아·비장애아 여름통합캠프에 참석시켰다는 것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해임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난 해 7월 캠프가 열리기 몇 주 전부터 진행했던 학교와의 협의 과정이나 학부모들이 아동의 캠프 참가를 이미 신청했던 사실은 무시됐다. 그리고 교장이 끝까지 통합캠프 참여 불가를 고집하는 바람에 도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연가 신청을 내고 통합캠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명령불복종으로 징계 해직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지난 달 28일부터 두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두 교사를 포함해 특수교육 교사들과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이 시작해, 현재는 노들장애인야하 등 12개 장애인·학부모 단체들까지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명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도 두 교사의 징계 철회를 위해 나섰다. 지난 달 16일 학부모 72명과 교사 23명은 부당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학부형 노유선 씨는 지난 여름 5학년인 아들들을 도 교사 등이 준비한 통합캠프에 보내고 싶었으나, 학교장이 캠프 참가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고 해 아들을 통합캠프에 보낼 수 없었다. 노 씨는 "현신적으로 학생들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인데 징계는 너무 부당하다"며, "당장 설 지나면 개학인데 도 선생님이 맡고 있던 5학년 1반 아이들은 어찌될지 걱정"이라고 말한다. 또 노 씨는 개학일인 18일엔 다른 학부모들과 학교장을 찾아가 두 선생님에 대한 부당 징계에 항의할 계획이다.

이제 두 교사의 부당징계 철회 투쟁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운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번 징계 사건은 '통합교육의 활성화'는 말 뿐이며, 실제로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이 학부모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묵살하고(→2면으로)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지난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점검해볼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아동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심사가 그것이다.

아동권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에 가입한 세계 최대의 인권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아동이 처한 구체적 현실과 정부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사전실무회의를, 내년 1월에 본회의를 제네바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은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할 대안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실태조사보다는 행정동계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쓰느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3차 보고서 때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힘을 기울여 아동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민간단체의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아동권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연합’의 로라 버그만씨는 “아동권조약이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보고서는 1차 심사 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한국의 아동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간과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1차 심사 때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대안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사전실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2월 21일부터 대안보고서에 답을 한국 아동의 인권실태를 주 1회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류은숙)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가 아니고, 따라서 파견노동자를 ‘잘라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 지무영 씨 등은 인사이드코리아 소속으로 각각 SK(주)의 서울물류센터와 대구물류센터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앞서 SK(주)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지씨 등은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SK(주)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씨 등이 SK(주)의 지휘·명령, 인사관리 등을 받았다는 점 △이들이 종사한 업무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이번 사건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년이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파견노동자의 고용의무를 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한 파견법 제6조 3항 ‘직접고용 조항’에 대해, 법원은 “결코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직접고용조항은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상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파견이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SK에 고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소송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파견법의 고용안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 사회정의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6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범용]

(→1면에서)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6일 노동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및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실험될 수 있도록 장려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현재 두 교사는 지난 달 22일 교육부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재심 결과는 신청 후 7주 이내에 나오도록 돼 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8일(금)

제 20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환경미화원, “약속은 지켜야지”

안산시청,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

안산에서는 6일 환경미화원 5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다음 날인 7일 오후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안산 시청이 이천희 씨 등 5명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명령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행 당시 미화원들 중 3명은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 앞에서 있었고, 1명은 마스크를 사러 가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카페라를 찍고 있었다. 7일 오후 경찰에서 풀려난 이 씨는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긴급체포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시청 앞에서 왜 시위를 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안산시의 미화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노동조합 안산분회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것은 지난 달 24일부터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 28일의 노사합의를 청소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산시청에 요구하기 위한 시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3월 27일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청소업체는 그 중 21명에게 해고 내지 정직을 통보하고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5월 3일 미화원들은 노조 탄압 중지와 더불어 임금 횡령 등 청소업체 비리 근절과 임금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안산 내 8개 청소업체들은 행정자치부의 임금기준 이상의 임금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청소대행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산시의회의 청소업체 감사에서도 밝혀졌는데, 2000년도의 경우 시청과 청소업체 간 계약서 상 임

금은 34억여원인데,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총 임금은 21억여원 뿐이었다. 미화원 1인 당 월 평균 3-40만원 가량을 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청소업체는 미화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5월 중 세 차레나 청소차량의 열쇠를 주지 않고 차고지의 출입구를 막는 등 고의적으로 미화원들의 청소업무를 중단시켰다. 이어 6월 19일부터는 외부용역경비원들을 동원해 미화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시청 공무원들도 미화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며 노동탄압을 거들었다고 경기도노조는 밝혔다.

가까스로 8월 28일 청소업체들과 미화원들은 안산시 환경건설국장이 임회한 가운데 합의를 맺었는데, 내용 중

엔 그간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청소업체의 임금 횡령을 중단케 하는 조처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테면, 청소업체는 청소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기준에 비추어 적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2001년 1월 치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또 6월 19일 이전 정직자 전원에게 청소업체가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인수 경기도노조 법률국장에 따르면, 합의서의 주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업체에서 일하는 최석준 씨는 “소급해서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은 물론, 현행 임금도 여전히 행자부 임금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직 기간의 임금을 아예 주지 않은 업체도 있고 *업체는 3개월 정직에 총 50만원만을 주었다고 한다. 미화원들이 시청 앞에서 ‘8월 28일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청소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시청이 나서서 문제를 (→2면에서 계속)



만화사랑방

이동수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결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간첩개성 목적의 탈출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답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으로,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법원은 범민련 측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강령·규약을 개정하려는 작업은 지난해 계속된 범민련의 활동"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강령·규약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범민족회의와 공동의장단회의가 열려야 하나, 당시 범민련 방북단 6명 규모로는 공동의장단회의조차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범민련 측의 주장.

법원은 또 범민련의 모임은 정부로부터 허용된 모임이 아니라며, 범민련 북측본부 사람들과 만난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민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추진본부가 부문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부했고 추진본부는 부문별 모임 중 하나로 범민련 모임을 명시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부문별 모임을 하나하나 지목해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 결국 법원은 여러 부문별 모임 중 유독 범민련 모임만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셈이 됐다.

이에 '통일연대'는 "(재판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방북과 회합 과정 전반이 정부 당국이 보장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됐고 "검찰과 재판부는 (범민련의 활동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공안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완 변호사는 "법원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방북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범민련 광주전남 임동규 의장과 서울시연합 문재룡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으로 투병 중인

문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임 의장만이 구속된 상태다. [범용]

오태양씨 경찰 출두 ... 조사 후 귀가

연대회의, '병역거부자 불구속수사' 촉구

지난해 12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입영기피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부경찰서로 출두한 오 씨는 입영거부 사유 등에 대해 1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벌이기로 하고, 오 씨를 되돌려 보냈다. 경찰은 2차 소환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라며, "병역거부자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태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정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조]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오는 5월 24일 열릴 예정인 2002년 제6회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상영작으로 확정된 작품은 제6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후보작이 됩니다.

- 출품대상 : 2001년 6월1일 이후 제작된 국내영화 중 인권 주제의 작품이며 장르와 매체에 제한없음
- 접수기간 : 2002년 3월 2일(토) - 3월 30일(토) 오후 2시까지
- 접수처 :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110-522) Tel : 741-2407 Fax : 741-536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당일 소인 유효/이메일 접수불가)
- 제출내용 : 참가신청서 1부(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 심사용 VHS tape / 영화스틸 3매 이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9일(토)

제 20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죽자고 여기까지 왔나!" 죽은 이를 부르는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차가운 회색빛 공기를 갈랐다. 새까맣게 타 버린 군산시 개북동 성매매 업소 '대기' 입구엔 지금도 깨진 유리조각과 슬리퍼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다. 8일 아침 9시 14명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은 이 참혹한 화재현장 앞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여성·사회단체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굴 같은 쪽방에서 소리소리 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곳은 감옥 아닌 감옥. 나는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화제가 아니더라도 난 이미 질식당했다." 안일순 씨의 추모시가 낭송되자 유족들은 오열을 토했다.

실제 성매매 업소 '대기'는 커다란 굴과 같았다. 들던 대로 문은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다다다닥 불어오는 작은 방들은 모두 창문을 합판으로 막아 햇빛이 들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 끝엔 철문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이 문 앞에서 14명의 여성들은 서로 엉킨 채 죽어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경숙 공동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여성들이 빚더미와 감시 속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노예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며 "이제는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고 당부했다. 죽은 이의 자매인 한 여성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보며 율리어나 업신여기며 희롱했고, 필요악이라며 노예매춘을 정당화했다"며 고인을 보내는 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인신

매매·협박·갈취를 일삼는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관의 유착비리에 대해 정직한 수사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례식을 지켜보던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공무원과 업주 간의 유착비리에 대해서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최문성미 조직국장은 "2000년 군산대명동 사건에서 군산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은 신뢰를 잃었다"며 "경찰청장 하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적극 수사에 나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주의 유착관계나 삼남 거리에 대해서는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면에서 계속)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9·11 테러 이후, 부시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광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기어코 아프간 민중을 살육의 현장으로 내몬 것 뿐 아니라, 각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야말로 미국에서 지수입된 '광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테러',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유행어가 악랄이 떨어졌다고 보였는지, 부시는 또 하나의 '유행어'를 생산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른바 '악의 축'.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대상으로 하는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자국 군수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전 세계를 전쟁 위험 아래 놓이게 해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는 19일 부시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악의 축' 발언과 부시의 방한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부시는 한국공군의 F-X 사업과 관련 미 보잉의 F-15K 무기구입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왕'의 자리를 만끽할 것이 분명하다.

'악의 축' 발언 이후 전 세계는 부시의 오만함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국내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우리 또한 부시의 방한에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의 사절'이 아닌, '전쟁수출광'을 우리 민중은 결코 반길 수 없는 까닭이다. '전쟁광'을 상대로 공항에까지 영접을 나가는 한국 대통령의 비굴한 모습을 전 세계에 타진하고 싶지 않다. 한국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명확히 밝혀야 할 때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여론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해답은 바로 부시의 방한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이상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부시를 향해 한국정부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일 것이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서울 염창동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철문은 안으로 용접된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큰길까지 10미터 정도 되는 골목길에는 흥측스럽게 쌓인 온갖 가구들과 아이들의 놀이기구들이 비닐장막으로 우악스럽게 덮여져 있었다. 철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어린이집 건물은 이제 막 철거를 기다리는 듯 난장판이었다. 지난 5일 새벽 시그네틱스(대표이사 양수제)가 노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파괴한 직후 현장의 모습은 비참했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은 지난 96년 노사합의로 설치된 후 시그네틱스 지회(지회장 정해경, 아래 시그지회)에서 계속 운영해 왔다. 어린이집에는 6명의 교사와 3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빼앗겨 버렸다.

그날 어린이집 파괴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그네틱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강제로 폐지했던 것. 같은 이유로 시그네틱스는 이미 두 차례나 강서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지 신고를 반려받은 바 있다.

한편, 시그네틱스는 어린이집 파괴 직후 시그지회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에 시그지회는 7일 영종그룹 본사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이모 씨가 경찰의 방패에 얼굴이 찍혀 코뼈에 금이 가고 14바늘이나 꿰맨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시그지회는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고, 실현후 주말까지 어린이집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8일 현재 시그지회의 파업투쟁은 2백일을 훌쩍 넘고 있었다. (범용)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난해 8월 '여호와의 증인' 교아무개씨의 구속영장기각 이후 영장기각 사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조)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불멘 소리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되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엔 술까지 만취한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마치 병원을 찾듯 노역장인 교도소로 들어오곤 한"다며 "이 단계에서 병원이 아닌 교도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어떻게 깊어진 병마로부터 수용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의 사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원동력이 되어 교정시설인 까닭에 어려움이 따르는 교정의료의 애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 수용자 사망률을 일반사회의 6.2%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유족들과 인권단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박명원 씨의 부인 임영화 씨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이라며 분개했다. 임 씨는 "동료재소자들이 치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만큼 상태가 악화돼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측은 노숙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들떠보지조차 않았다"며 "안에서 의무과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왔다면 이도록 분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바 있는 인의협 소속의 한 의사는 법무부의 답변이 "상식이하의 억지"라며 혀를 찼다. 그는 "법무부가 수용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시키고 있다"며 "그렇게 죽어간 수용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사망률이란 정확한 통계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사회 사망률이 사고 및 노화로 인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수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식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유해정)

(⇒ 1면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기사 이어짐)
한편,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서울지역 노제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민중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서대문 지하철역의 출구를 봉쇄해 나가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경찰청 접근을 막는 등 노제를 방해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 노제 참석자들은 "성매매는 일시적인 단속이나 쇄창살 제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성들을 감금,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이를 방조하는 각종 유착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15일(금)
제 20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희망퇴직' 압력에 노동자 사망

대우자판,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 종용

'희망퇴직' 압력에 시달리던 대우자동차판매(아래 대우자판)의 한 노동자가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죽음을 맞아야 말았다. 지난 12일 대우자판 노동자 박찬원 씨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간 도중 사망했다.

병원은 박 씨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박 씨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회사의 끊임없는 판매 신장 압력이 심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됐고, 지난 해 11월부터 감도 높게 진행됐던 퇴직 내지는 새 임금 체계의 수용 권유가 박 씨의 병세를 악화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84년 대우자판에 입사해 18년 간 영업사원으로 일해왔다. 85년경부터 신촌영업소에서 같이 일하면서 박 씨와 절친하게 지냈던 박찬호 씨에 따르면, 박 씨는 원래 매우 건강한 편이다. 그러던 박 씨가 심장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 박찬호 씨는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 '영업소를 폐쇄한다'는 등 회사에서 말이 많아, 박 씨가 영업소의 만행으로서 판매 실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심지어 이사급 한 명은 박 씨 등을 불러서 '너희는 막말로 기생충 같은 놈들이다. 판매 실적은 얼마 안 되면서 회사 피를 빨아먹으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병원에선 박 씨에게 급성 심근염이라며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2년 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안정을 유지한 덕에 거의 건강을 되찾았던 박 씨는 지난 11월 경

다시 심장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이었다. 이때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고정급 43만원의 성과급체계 아니면 희망 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 본지 6일자 참조)

박찬호 씨에 따르면, 새 임금체계를 수용할 경우 한 사람이 한 달에 7-8대의 차를 팔아야만 기존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12월 11일 노동조합의 다른 동료들은 회사가 제시한 새 임금체계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으나, 박 씨는 며칠을 함께 하지 못하고 농성장을 뜰 수밖에 없었다. "너네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만 가냐?"던 박 씨를 조

함원들은 등을 떠밀어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측은 요양 중인 환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했다. "소장이 전화를 걸어서 명예 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니면 2월 7일부터 정리해고 된다면서. 그리고 파업현장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몇 붙였어요." 박 씨 대신 전화를 받았던 부인 윤모 씨는 말했다. 그 후로 전화만 오면 혹시 회사가 아닐까 매우 예민해 했다는 박 씨는 12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윤 씨는 "18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심리적 중압감이 컸겠냐"며, 회사가 박 씨의 죽음을 재촉한 셈이라고 했다.

회사의 노사협력부 관계자는 박 씨의 죽음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라고 말하면서도, "판매실적을 올리는 건 영업직원의 본분이다.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희망퇴직이나 임금체계 전환은 불가피했다"며 회사의 최근 구조조정 방침과 박 씨의 죽음을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이동수



의원 67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감청·출국금지·압수수색 요청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장해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사기간을 올해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대표발의자인 이창

복 의원실 측은 "4월 이후 경선국면에 접어들면 회기가 공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여야 간에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에 따른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다만,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사건의 경우, '사실상 사건을 종료'했던 기존 법률과 달리,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에라도 재규명 작업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게 된다. (이창조)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집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림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도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의 주5일제 도입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보다 개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가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취지를 거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여성민우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8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 △2-3년 내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초과근로 대폭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유급 생리휴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5일근무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1면 '희망퇴직' 기사에서 이어짐)

연결시키지 말라고 강변했다.

한편, 노조는 박 씨의 죽음과 관련 회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할 것과 유가족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수립에 관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씨의 발인은 16일이며, 장례식은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장으로 열린다. (이주영)

부시방한 반대 7대 핵심요구 및 주요투쟁 일정

- | | |
|---|------------------------------|
| ①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하라 | ▶ 1인 릴레이 시위 |
| ②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 2월 14~21일/ 미대사관 및 용산미군기지 앞 |
| ③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 ▶ 2월 16일(토) 전국 동시다발 집회 |
| ④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 ▶ 2002 한반도 평화선언대회 |
| ⑤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곡물 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 2월 18일(월) 오전 10시/ 명동 YMCA 강당 |
| ⑥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방해하지 말라 | ▶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시국농성 |
| ⑦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 2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미정 |
| | ▶ 부시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그림자 투쟁 |
| | 2월 19~21일/ 부시가 가는 곳곳 |
| | ▶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
| | 2월 20일(수) 오후 3시/ 종묘공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16일(토)

제 20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지난해 9월말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3명이 15일 무죄판결을 받아, 경찰이 이들에 대해 강압수사를 벌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 조모 씨가 절도 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그날 경찰은 조씨를 검거 1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중학교 동창인 한모 씨와 이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씨의 검거 다음날인 21일 밤 경찰은 한씨와 이씨도 연행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원주지검은 이들의 자백을 근거로 같은달 25일 살인혐의로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살인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예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흔적이 역력했다.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윤요왕 사무국장은 "조씨는 중학교 때 한씨, 이씨와 이름만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국장은 "모범생이었던 한씨와 이씨를 공범이라고 하면 자신의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조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기록에 따르면 2000년 10월 14일 00:15경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나, 그 시간에 망인은 동창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경찰 수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한씨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안 그랬다'고 하면 경찰들은 두들겨 패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

는 각목을 휘두르며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아이들은 경찰이 커터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5개월 가까이 살인누명을 써야 했고 부모들은 살인자의 부모란 편견과 억울함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이들 부모와 원주지역 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수사했던 안모 경위 등 5명에 대해 형사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용)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발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는 충격은 엄청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부금 입학제도 허용, 교교평준화 폐지 및 교교간 등급제 인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은 한마디로 '경제 능력에 따라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라'는 선언이다. 학교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확실한 입시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요, 투자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나는 항변이다.

경제논리와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은 평등성과 공공성에 뿌리박은 것이기에 많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띄어왔다. 우리는 '특별한' 돈과 '특별한' 간판에 매인 교육을 원치 않는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통' 교육을 원한다. 입시위주를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학교를 개성이라 말하지 말라. 입시형 고급 학교의 육성은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평등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그 본질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한 발상과 대담한 설과를 당장 중지하라.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류미경,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전세계에서 6만명 가량이 브라질 포르토크르에 몰려들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급 사교클럽이라고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계사회 포럼의 규모와 참가자 수, 각 국 언론의 관심 등으로 보아 99년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작년 제노아 투쟁까지, 해를 거듭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IMF, WTO, G8 정상회담 등 국제기구들의 연차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들의 문제제기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하듯, 뉴욕으로 옮겨진 진행된 올해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사회포럼은 크게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전체토론회, 누구든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규모 워크샵, 그 밖의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특히 3세계 민중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외채와 IMF 구조조정의 폐해를 낱알이 고발하는 '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오는 2005년으로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FTA(전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행진 등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참가자들 전체가 통일된 입장과 결의를 모으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경험과 입장을 교류하고 연대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1회와 마찬가지로 '행동 호소문'을 작성하여 세계노동절, G8 정상회의등을 계기로 한 공동 투

쟁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번 2회 사회포럼에서 특히 부각된 쟁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 및 확전 계획과 플랜콜롬비아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사주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경제위기와 엔론 사태 등에서 보이는 금융세계화의 폐해와 회복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었다. 또한 WTO 뉴라운드와 출범과 FTA 등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도 큰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항의가 긴급하게 조직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더욱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계층이 점차 폭넓어지고, 이들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001년/ 서울영상집단 제작 (02-745-4641)/ 이마리오 연출/ 50분/ 다큐멘터리

몇 년전 인권운동사랑방에는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해방감으로 북새통을 이룬 적이 있다. 대부분 부랑인으로 찍혀 노예노동을 감수하던 이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이 없이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다. 작년말 제작된 독립 다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증 제도에 대해 된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이마리오 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에 동참했던 인물. 작품의 동선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씨의 투쟁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민증 반대자들의 논리와 정부의 주장을 교차시켜 놓고 있다. 주민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모자랄 정부 관리들은 오히려 '못생긴 얼굴'이 찍히는 것이 '초상권'에 위배된다고 카메라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돌아서 버린다.

이 작품은 현재 KBS의 열린채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을 신청해 놓은 상태. 하지만 열린채널 측은 육설 부분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 등 여러 장면을 문제삼고 있다. 열린채널의 요청은 상당부분 창작자의 자율에 대한 간섭으로 비친다. 작품이 빠른 시일내 전파를 탈 수 있을 지 아직 미지수이다. 제작자인 서울영상집단에서 현재 비디오로 배급중이다. [김정아]

아르헨티나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2월의 봉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MTD(실업노동자운동), 브라질의 MST(무토지농민운동)가 주축이 되는 국제농민조직 Via campesina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의 문제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포럼 기간동안 브라질의 도시빈민들이 도심에서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건물을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곳을 지나는 행진대열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내년부터는 포르토크르에서의 세계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대륙별 회의가 개최되고, 2004년에는 세계회의를 인도로 옮겨올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주도권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3세계 민중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몇몇 명망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점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에서 세계 각국의 기층 민중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민중운동의 역할이기도 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19일(화)

제 20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무기강매·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대북 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아침 10시, 명동 YWCA 강당에서는 각계 인사 7백인의 평화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효재 여성단체연합 고문, 조종환 시인,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각계인사들은 미국에게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게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도 국제적 논의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침 11시 30분 서울 세종로의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의 연대기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 방한 반대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시국농성에는 정철찬 전국농민회 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등 200여 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어떤 방법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호전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부시는 1백여 대의 F-15K 전투기를 비롯해 이지스함, PAC-3 등 4조원에 이르는 무기의 강매를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MD체제로의 편입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외신은 부시 대통령이 1백대의 F-15전투기 구입을 김 대통령에게 요청할 거라고 보도했다.

이후, 홍근수 목사, 오종렬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서 발표된 7백인 평화선언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이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편, 시국농성자들 중 39명은 시민공원에서 농성 중 오후 5시경 경찰에 연행돼 북부경찰서와 중앙경찰서에 구금됐고 나머지는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낮 12시 50분 경 한총련 학생 27명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45층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전쟁학대 무기강매 부시방한 반대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농성을 벌이다 오후 3시30분 경 출동한 경찰 특공대원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이주영)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등은 거의 13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병역특례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천6백여명에 불과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구제여지가 과연 없는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대 김병렬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확신'에 의한 병역거부로 용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인권의 문제지만, 다수자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렇듯, 18일 KNCC 인권위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찬성발언에 나선 전국목회평의 정진우 목사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증인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병역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다"고 개인적 심경을 솔직히 토론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최상경 목사는 "너무나 잘못된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여호와의증인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했다. 창공교회 장병선 목사도 "예수가 올 때까지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며,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2백50여 명이 참석해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의 갈 길은 멀게만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병역거부권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온 기독교계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벌이므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종교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범용)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테러는 전쟁의 권리를 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 테러가 마치 미국에 '무제한의 사냥 허가증'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동은 지지 당하지 않았다.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각국의 시민단체들만이 그에 항의하고, 법질서에 따른 대응을 호소했을 뿐이다.

1945년 당시 처칠은 나치스 테러의 책임자들을 즉결처분할 것이절차를 제안했지만 트루만과 스탈린은 유럽의 형법 전통에 입각한 법정이 반파시즘을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제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심판할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을 예고되고 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로마협약에 찬성했다. 이후 139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각국의 비준이다. 2002년 2월 12일 현재 52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여 동 법원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60개국 비준에 바짝 다가서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법원을 조속히 출범시키려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은 미군과 미군의 명령권자가 절차적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국제형사법원의 피고인적으로 불려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원의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미국정부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군사행동 전체의 합법성이 동 법정에 의해 단죄되는 상황이다. 그들은 국제질서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미국의 오만 때문에 9·11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찰머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을 지원하는 듯하지만 이른바 반테러 국제연대는 가짜다." 그의 지적은 옳았다. 견고해 보였던 반테러연대는 유럽국가들의 비판을 필두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진작 그렇게 되었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세계 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국제연대에 맞서 평화와 반테러전쟁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로마협약의 비준을 서두르는 일; 이것이 평화의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계수 : 울산대법학부 교수이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주간인권호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1. 무기장사꾼·싸움꾼 부시, 오지 마!

소과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2.6)/ 여야 의원 5명,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관련 미 대사관 항의 방문...무기강매 포식 가능성 추궁(2.6)/ 여성단체, '한-미 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평화선언' 발표(2.15)/ 각계인사 7백인, 대북강경책 중단 촉구 평화선언 발표 →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 반대 시국 농성 돌입 → 한총련 학생들, 미 상공회의소 접거 '무기강매, 전쟁 확대 부시 방한 반대' 주장(2.18)

2. 성매매 없는 세상으로 고이 가소서!

군산경찰서, 군산시 개북동 성매매업소 '대가' 실제 주인 이상일 씨 구속영장 신청 ... 여중업원들 감금, 매매춘 행위 강요 혐의(2.5)/ 군산 화재사건 희생자 합동 장례식... 참석자들, "감금매춘·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철저 조사,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2.8)

3.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

한국개발연구원, '비전2011' 보고서... "대학 기부금 입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 진병 장관, 기부금 입학제 동조 → 이에 교육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반발(2.14) →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왜?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이 경북 예천의 민가를 폭격해 3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 발견돼(2.5)/ 국방부, 한국전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태 40건 접수받고도 '현장조사 금지' 지시 사실 드러나(2.6)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불구속 수사 물꼬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2.8) →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기각(2.16)/ 병역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제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동차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서울염창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국가인권위, 13개 분야 70여명 공채계획 발표(2.14)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자 6명 전원 유죄 판결(2.7)/ 원주지원, 살인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명 무죄 판결... 경찰, 허위자백 강요 의혹(2.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0일(수)

제 20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대우차 해고자, 상처와 회한의 1년

“공장으로 돌아가리라”, 복직지원제 열어

2002. 2. 19. PM 4:30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정문의 양 옆을 가로막고, 그 사이로 5미터 남짓 열린 공간에는 군화를 신은 경비용역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경비용역 뒤편으로는 열 대 가까운 전 투쟁청대 버스와 전경들이 진을 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쫓았던 경찰은 승자의 위세를 과시하는 듯, 그렇게 공장을 지키고 서 있다.

부평공장 경찰력 투입 1주년을 맞은 19일, 대우차 해고자들의 회한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설마 1년이야 같까 생각했는데...", 가족에게도 1년만 싸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습니다." (해고 조합원) 연인원 수백명이 경찰서 유치장을 들락거렸고, 4월 10일엔 그 끔찍한 경찰폭력마저 경험했던 대우차 해고자들. 하지만 1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처지는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생계의 부담만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다만, 회사측에서 '복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해고자들은 일말의 희망을 찾고 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에선 2003년까지 2백명 가량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연퇴사자가 늘면서 회사로서도 인력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그러나 복직자 선별작업을 누가 하는냐는 쟁점에 부딪혀 노사간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2002. 2. 19. PM 2:30
부평역광장

"감재와 감시 속에 우울하고 고통에 찬, 죽음의 고역같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위대한 노동자의 깃발 날리자" 원로 노동운동가 오순구 씨가 힘차게 노동해방가를 부르며, 대우차 해고자들의 투쟁을 격려하고 나섰다. 부평공장 정상화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200여 해고자들의 합성이 광장에 메아리치고 있다. 집회장 뒤편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해고노동자 차현호(34) 씨를 만나 지난 1년의 소회를 들어봤다.

"대우자동차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 앞에서 땀땀하고 싶기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입사 8년만에 정리해고된 차현호 씨는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 모인 조합원 가운데 8-90%는 아무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는 형님이 왜 투쟁에 나서겠는가! 그저 묵묵히 일하다 억울하게 쫓겨났기 때문이다."

차현호 씨에게 복직 못지 않게 걱정스런 문제들이 많다. 가족의 보금자리인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부터가 걱정이다. 지난해 8월 차 씨의 가족은 퇴거명령서를 받았다. 해고자는 더 이상 대우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요구였다. "떠나고 싶지만 갈 데가 없다.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 떠나면 투쟁 현장에도 못 나올 것 같아서다." 투쟁이 마무리될 (→ 2면으로 이어짐)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펴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 347쪽
문의 : 유혜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를 포함해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즉,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류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2부〉

사회보호법 등 관련 법령(5개)/ 군 행형법 등 관련 법령(3개)/ 소년원법 등 관련 법령(2개)/ 교정시설 경비교도 설치법 등 관련 법령(2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3개)/ 피구급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구급관련 국제 기준(3개)/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참고도서 목록/ 감옥관련 법조·인권단체 연락처 (최은아)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신안그룹 계열사 관악리베라C.C. (아래 관악C.C.)가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 신입생 입사서류를 내게 해서 노조간부 등을 해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악C.C.는 지난달 19일 돌연 신입생 모집공고를 붙인 후 기존 경기보조원 2백38명 전원에 대해 재입사 절차를 밟았다. 이들 경기보조원은 같은달 30일 형식적으로 면접을 봤으며, 이후 관악C.C. 지부(지부장 박난주) 양도영 교육부장 등 6명은 사측으로부터 근무통보를 받지 못했다.

양 교육부장은 "회사규정에 어긋나서 해고되지 않으면 본인이 다니기 싫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것이 관례"라며, "이렇게 면접을 실시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잘렸다"며, "노조간부라는 것 말고는 잘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교육부장은 관악C.C.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었으며, 해고된 사람 중에는 1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있었다.

이에 전국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노조말살 책동을 중단하고 정리해고된 노조간부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여성연맹은 양 교육부장 등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재입사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이번 조치가 보복성 해고임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박 회장이 40억원대의 내기골프와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이다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 양 교육부장 등은 박 회장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한다.

관악C.C.의 이례적인 조치가 노조를 약화하기 위한 부당해고라는 근거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양 교육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관악C.C. 정용화 이사는 박난주 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를 포기하면 짜르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달 10일경에는 '경기마스타'라는 정규직원이 경기보조원 조장들에게 "조합원들을 근무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관악C.C. 경기과장은 "부당해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캐디(경기보조원)들은 직원이 아닌데 해고는 무슨 해고냐?"며 경기보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한편, 여성연맹은 21일 오후 4시 신안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관악C.C. 지부는 박 회장의 공판기일에 맞춰 오는 25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서 구단집회를 한다. (범용)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 1면 '대우차 해고자' 기사에서 이어짐)

때까지 잘대로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차 씨는 거듭 확인했다.

해고자 가정 모두가 겪는 '생계의 압박' 역시 차 씨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9월부터 실업급여마저 끊어진 뒤라, 이제는 퇴직금(1천만원 가량)을 까먹으며 지낸다고 한다. 임신중인 차 씨의 아내는 따로 생업전선에 뛰어들 처지가 못 된다. "다섯살 짜리 아들이 가방을 둘러메곤 놀이방에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놀이방에 보내자면 매달 10여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걱정이야. 해고된 뒤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낼 때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년의 과정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는 차현호 씨. 그러나, 위안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부터 복직을 포기했다면, 앞으로도 쉽게 포기하고 살게 됐을 것이다. 이젠 복직이 안 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공장 정문을 돌파하는 싸움을 해보고 싶다. 정문을 통과하리라곤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진대열에 합류하는 차 씨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2002. 2. 19. PM 6:00 부평공장 정문 앞

정문 앞에 모였던 2백여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통지서'로 도배한 조형물에 대해 화형식을 갖는 것으로 '복직기원제'를 마무리했다. "더 이상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박한 기원을 확인하며, 이후의 투쟁을 약속하는 것과 함께 해고자들의 하루는 저물었다.

〈짧은 인터뷰〉 정리해고투쟁 1년의 사람 4·10경찰폭력 피해자 김낙기씨

4월 10일 경찰의 폭력진압 당시,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김낙기(32)씨였다.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던 김 씨는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퇴원을 했다. 몸 속에 박혀 있는 철심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 씨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다.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복직투쟁에 동참했다는 김 씨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답답하기만 하다. "오로지 다시 회사로 되돌아갈 날만 기다린다"는 김 씨. 그의 어머니는 "기술이라도 있으면 다른 직장이라도 찾아볼 텐데..."하며, 안쓰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1일(목) 제 20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 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

규정의 모호성 △테러범죄 미신고죄와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한다는 의사일정이 알려졌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은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일에는 여야 독설공방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아랑곳 않고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단체대표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낮 2시에는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범용)

부시방한 반대,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참가자 여럿 부상

부시 미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0일, 서울 도심에선 미국 반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게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종로 공원에서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별도로 대학생 1천여 명은 낮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시 방한 반대를 외치며 한양대, 용산, 동대문, 신설동, 을지로 등지에서 기

습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농민회총연맹,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노점상연합 등 노동·농민·빈민·여성·시민·종교단체들이 총집결해 미국의 안하무인적 일방주의에 대한 높은 불만을 엿볼 수 있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연설에서 "아이들은 우리 강산에서 남북북

가지지 않고 사이좋게 살 권리가 있다"며 미국의 한반도 평화 위협을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일 사무총장은 "미국은 서울 안 1백만평이나 되는 땅을 미군기지로 차지하고서, 기름, 화학물질, 포르말린을 버려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미국이 강매하려는 F-15기 100대의 값 13조원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5% 인상할 수 있는 액수"라며 "부시가 자국의 군산복합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같이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데 경총 등은 일간지에 부시 환영 광고를 게재하고 대대적인 잔치를 준비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미국은 △전쟁확대 △미국식 자본주의 강요 △MD 강요 △전쟁무기 강매 등을 중단하고 △미군기지 반환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과 △소수파협정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다운 당당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범국민대회 중간에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작은 성조기를 라이트로 불태우자 집회장 앞쪽을 치고 들어와 군봉과 방패를 마구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집회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집회 참가자 여럿이 다쳤다. 그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기현숙 대표 등은 이마 부위가 찢어져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집회 후, 경찰은 해골이 그려진 성조기를 붙인 차량 4대가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채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밀치고 카메라를 훼손해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문정현 신부는 "미국마저도 성조기 소각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하는데, 왜 우리나라 경찰은 성조기 때문에 자기나라 국민을 치기까지 하나"며 개탄했다. (이주영)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원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등 2백명은 지난해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본지 12월 25일자 참조> 경찰청은 국민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열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보관하며 이를 전산정보로 변환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청구인들의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거부할 당시, 경찰청은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들은 자기정보를 열람해야 하며,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가 청구인의 정보와 상이할 때 정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윤씨 등 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경찰 쪽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중 이미리오 씨가 지난해 6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사본을 경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았으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전원이 동일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구권 및 반환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정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불합리한 개인정보 또는 법률의 근거없이 공공기관의 임의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등에 있어서도" 자기정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범용]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민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부시방한 직전인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 아래 전농) 정광훈 전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구속됐다. 정 전의장 등의 구속은 전농의 부시방한반대 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전민련·민중연대 등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성명이 19일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정 전의장과 배 국장의 구속에 대해 "현정권이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밀어붙여 살농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민련은 "농민들의 투쟁을 촉발시킨 것은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이라며, 두 사람의 석방을 촉구했다. [범용]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제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과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도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 있다.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단체에 관하여 "실질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실질목적 불문"한다는 요건은 테러단체의 범위를 ... 모든 종류의 단체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주요기관들은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 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 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2일(금)
제 20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 폭력에 법적대응”

경찰이 부시 방한 반대 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에게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9일 새벽 2시경 북부경찰서의 형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쳐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전모 경사가 안면을 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폭행은 30분 가량 계속됐으나, 당시 이 씨는 의경 1명과 수사계 전모 경사가 뒤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18일 오후 5시경 연행된 이 씨 등 10명이 목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새벽 2시경 각각을 격리시킨 후에 일어났다. 이때 이 씨는 형사계 당직실로 이동된 상태였고, 새벽 3시 경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이 씨는 20일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형사계 전모경사는 21일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다. 또 수사계 전모경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민중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사전경고도 없이 종로 공원에서 열

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바 있다. 또 경찰은 20일 아침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1시간 이상 둘러싼 채 불법 감금하기도 했다. [이주영]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홍근수 민중연대 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

만화사랑방



이동수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필리핀 인권기행 ①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필리핀에서 인권 연수를 한 고근에 상임활동가가 쓰는 필리핀 인권기행을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질 높은 교육?"

필리핀의 한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실 벽에는 '질 높은 교육'이란 표어가 붙어 있었다.

방문을 주선했던 필리핀 담당자의 시선이 그 표어에 멈췄을 때 그녀는 살짝 눈살을 움직이며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녀의 태도가 의아하게 생각됐지만,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 운동단체 액트(Alliance and concerned teachers Phillipines)를 방문하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액트의 레이몬드 사무국장은 필리핀 공립학교의 현실을 "책상이 없고, 칠판이 없고, 교실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만 수업을 하고, 교과서 1권을 7명의 학생이 나눠봐야 한다"고 묘사했다. 심지어 공립학교 중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25%나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교사들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3개 학년을 한꺼번에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교육내용에 대해 초·중등 교과를 5개로 축소, 인문 사회를 통합하는 반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늘리는 '새천년 교육과정'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액트는 정부가 '국경없는 교육'이라 선전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역시, 미국이나 외국자본의 이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레이몬드 사무국장은 필리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미국이나 영국, 홍콩으로 가정부로 나가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을 본떠 영어 교

육만 강조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마저도 모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초등학교 입학 학생 10명중 6명만이 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그 중 3명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 통계를 증명이라도 하듯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교복도 없고, 돈도 없어,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요"

2월 초, 민다나오 섬에서 만난 14살의 넨넨이라는 소녀는 '학생이나?'는 질문에 이처럼 찝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학교에 가고 싶긴 해요"라고 덧붙였다. 넨넨은 어느 집의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다. 학비는 무료였지만 교복과 책이 없는 넨넨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 않았다. 필리핀의 북쪽 도시 바기오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가 있을 때 만난 한 부인 역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그중 2명만 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학비 이외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2명의 아이만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나는 질문에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들은 부패에 찌든 정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 보였다.

한쪽에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사립학교가, 다른 한쪽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공립학교, 그리고 교문밖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공존하는 필리핀, 이 곳에서 국가의 책임이란 자취를 감춘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교육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은 산 속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교육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 속 마을 카뉴마이에선 지난 2001년 4월까지만 해도 공립초등학교가 하나뿐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카뉴마이는 작은 비정규 고등학교가 만들어졌고, 3명의 자원봉사 교사와 14살에서 21살까지의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 카뉴마이 고등학교의 주인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산 속의 반정부군들까지도 환영하는 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카뉴마이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한 칸뿐인 교실 안쪽에 그 간의 배움의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었고, 교실 벽에는 마닐라 시내에 다녀와서 그린 그림이, 영어 받아쓰기 시험지가 붙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사탕 껍질로 된 커다란 별과 탁자에 놓인 깡통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는 산 속 마을의 가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교사를 맡고 있는 벤지는 "이 학교에서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 기존의 교육 과정을 새롭게 정리해 만든 자신들의 교육내용은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으로, 더 이상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한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지금 추진하는 교육이 학생들 안에서 교사를 재생산하고, 마을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까지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지원 속에 당연히 계획되어야 할 학생들의 교육이 인간의 힘만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고근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3일(토)

제 20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2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터라, 월드컵을 받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라는 그 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본부 김성희 총무부장 대행에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놓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을 월드컵에 대비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 말하고 있다. 당달아 언론도 웅설수설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를 보도하고, 칼럼·기고문 등으로 반대여론을 설화하던 한겨레신문 등 언론까지 '테러방지법안 같은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행국회를 질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이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법이라는 국정원의 선전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보도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 전반이 '테러'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안의 '간판사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법안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모호한 범죄 규정 위에 서있다. 그 모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작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감시가 결코 미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테러방지의 미명 하에 또 아리를 틀게 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지, 더 큰 권한이 아님을 새삼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도 넘치는 것은 국가권력이요, 테러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할 법과 제도이다. 테러방지법안은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첩경일 뿐이다. 제발,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들여다보자.

따르면, 이날 '중소영세 사업장 희생 없는 주5일근무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11시경 전북본부 간부들 20여 명이 월드컵경기장 앞에 미리 모였다. 이때 전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들을 에워싸고 차에 실려 있던 천막을 빼앗았으며 전북본부 염경석 본부장 등 11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용노조 박재현 사무장은 크게 다쳐 서전주 정형외과로 후송된 후 CT촬영까지 받았다. 박 사무장은 머리와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주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이 '월드컵 준비기간에 천막농성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연행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천막을 꺼내지도 않았고 경찰에 둘러싸여 천막을 칠 수도 없었다"며, "경찰은 노동자들이 천막을 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연행사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전북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등 1백50여명은 경찰서장 면담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전주북부경찰서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범용)

지노위, 대용C.C.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

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공개했다.

전북지노위(심판위원회 위원장 김의영 공익위원)는 (→ 2면으로 이어짐)

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

필리핀 인권기행 ②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의 인권침해를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에 따라 1986년 코라손 아키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리핀은 '인권보장과 신장'을 우선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의 인권교육은 정부주도의 교육만 해도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셈이다.

정부 차원의 인권교육

지난해 11월 26일 필리핀의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권교육 교재'를 건네주었다. 1997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이 교재는 건강과 환경, 의사소통방법 등 기초적인 인권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보장과 증진에 인권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규교육 교과에 인권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고, 모든 교육단계에서 인권이 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 몇몇 민간단체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인권·교육단체는 이 교재를 모르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교육부의 예기와 달리, 정규교육 과정의 인권교육에 대해 민간단체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리핀 정부차원의 인권교육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초등학교·고등학교 그리고 상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가, 경찰과 군대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인권교육 담당자는 "경찰과 군대 등 특수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과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경찰과 군대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아직까지 가장 심각하고 빈번한 인권침해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의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연대의 끈

필리핀 인권교육의 또 하나의 형태는 민간단체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민간단체들의 인권교육 대상은 거리의 아이들, 전쟁(무슬림 무장 투쟁조직과 정부군이 전쟁 중에 있는 민다나오 섬)으로 집을 잃은 아이들과 여성, 반군지역의 가정 등 국가의 인권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발라이(BALAY:집)라는 인권단체 역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발라이의 활동가 카로이는 "죽음과 전쟁의 목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상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전쟁으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활동,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새기는 인권·평화교육 그리고 자립경제를 위한 지원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다나오 섬에서 난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ECDFC의 루즈 역시 "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 그리고 난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펌프, 화장실 등의 기초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까지는 군인이나 경찰의 횡포에 저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난민촌 공동생활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군인의 폭력에 항의하고 결국엔 사과까지 받아낸 사례를 이야기하며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외국 단체의 재정적 지원

이 있어 이런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루즈는 설명했다.

필리핀 양심수 대책회의 TFDP를 방문했을 때 마침 인권교육 담당자는 인권교육 교재에 쓰일 만화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부의 인권교육 활동에 대해 묻자,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서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 현실에서 그가 말한 민간단체의 '다른 길'이란 국가의 인권교육에서 소외된 약자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외국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민간 인권단체의 활동이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희생의 대상이 되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연대의 힘이었다. [고근에]

(⇒ 1면 '지노위' 기사에서 이어짐)

지난달 15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신청인 박성준의 4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체협약 29조에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 등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대용은 이 절차를 무시한 것.

하지만 전북지노위는 △전환배치 △차별적 업무지시 △연장근로 차별 △경고장 남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해·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종인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6일(화)

제 20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철도·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민영화가 물고 울 더 큰 국민적 불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며 25일 새벽 4시 철도·가스·발전산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가스공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는 높은 참가율을 유지하며 파업을 계속 진행했다.

공통의 요구는 민영화 중단. 현재 정부는 철도운영부문을 시설부문과 분리해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발전산업 역시 민간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가 빈발하고 요금이 올라갈 거예요."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이다. 이날 오후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만난 발전산업노조의 김연재 씨는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30-40% 올라갈 것"이라며 "요금이 오르고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캘리포니아는 민영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건국대에서 농성 중인 철도노조의 김윤기 씨는 "지금은 한번 정착할 때 2명만 타는 곳이 있다 해도 역을 세우고 기차 운행을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3만원 하는 서울-부산 구간 새마을호 요금이 민영화되면 14만원 가량이 될 거"라며 걱정했다. 지금은 경제논리보다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지만, 사기업들은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의 동료는 "이렇게 공기업을 다 팔아 헤치우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며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미 부천, 안양 지역

의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된 후, 지난해 요금이 평균 26.1% 인상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파업은 필수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첫날부터 사회단체들의 지지 입장 발표도 뒤따랐다. 이날 아침 11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민주연운 운동시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의 대표자들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연운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는 "이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주영)

<바로 고칩니다>

본지 2월 23일자 '월드컵 핑계 집회 탄압 현실로' 기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집회를 하려 했던 장소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입니다.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나, 전면철폐나" 갈림길

지난 8일 여야 국회의원 67인에 의해 발의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회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1일 법사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곧 선거국면이 접어들어 이후 법안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통과에서 의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조사권한 강화. 하지만 조사권한의 강화 없는 법안통과는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애초 의문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미약한 조사권한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함승희 의원 쪽에서 안건상정을 할 테니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제안했다"면서, "의문사법의 개정 내용을 대폭 양보해서라도 통과시킬지, 이대로 강행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모두 진정철회까지 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의문사 개념 재정의 △조사기간 연장 △조사권한 강화 △진상규명 불능 결정 신설 △공소시효 적용 배제 △제보자의 사면제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용)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① 하리수와 오태양

최근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성생활에도 인권 개념이 적용되면서, 트랜스 젠더가 대중 스타가 되기도 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희석되는 듯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 천년 동안 섹슈얼리티 억압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성폭력 당한 여성, 매춘 여성, 레즈비언들이 인권을 외치기보다는, 성폭력 가해자나 성을 사는 남성들이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의 인권'을 더 주장하는 사회이다. 아무리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유 구조가 없다면, 그것은 진보가 되지 못한다. 하리수의 등장은 한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사건이었다. 하리수는 타고난 성(sex)이 사실은 전혀 '생물학'적이지 않으며, 본질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하리수는 남성의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고통받으며 사느니 아예 다른 성을 선택했다. 그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여성성에 안착했고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 신발이 맞지 않는다고 발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하리수 현상은 이렇게 해석되지 못했다. 오히려 트랜스 젠더든 원래 여자든 '여자는 일단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는 기존 담론을 더 강화시켰을 뿐이다.

트랜스 젠더는 페미니즘이 필요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여자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자들도 있는데, 생물학적 여성들이 자기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트랜스 젠더라 해도 여성이 남성으로 성 전환한 경우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남성들은 이전에 여자였던 남성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성들은 남자로서의 기득권을 버린 여자를 '존경'할 수 있다.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는 경고처럼, 남성의 여성스러운 행동은 남자를 망신시키는 것이며, 그런 남성은 집단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남성들은 남성과 다른 성(여성, 게이, 성전환자, 장애인...)이 남성 범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남성이 비남성(성)을 차별하는 사회이다.

하리수의 성역할 위반이 성공한 반면,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벌이고 있는 오태양은 폭력과 전쟁을 옹호하는 군대가기라는 전통적 남성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상황이다. 오태양의 거부 투쟁이 '기피'가 된 것은, 특권층의 병역 기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대 가기를 의무이자 정상 남성으로서의 권리, 혹은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기는 남성 중심사회의 자체 모순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가기를 싫어하지만,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과 남성 연대는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유승준의 '기피'와 오태양의 투쟁을 구별하지 못한다. 성 역할 위반도 남성의 입맛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정희진 : 한국여성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

주간인권호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1. 부시는 '악의 확산',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0인 평화선언 발표(2.18) / 미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 성남시 서울공항 부시방한 반대집회(2.19) →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2.20) / 한총련 대학생들, 부시방한 반대하며 미 상의 기습 점거(2.18) / 경찰청, 주한 미대사관 쪽에서 한총련 점거농성 학생 인적사항 알려달라 비공식 요청했다고 밝히... "한총련의 점거농성이 테러인지 여부 검토 중"(2.20)

2. 경찰특명, '집회진압 인정사정 볼것없다'

경찰, 부시방한 반대농성 중 연행된 피의자 두 눈 찌르는 고문(2.19) /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중 경찰 집회장 난입...10여명 다쳐(2.20) / 경찰, 민주노총 전북본부 집회를 월드컵 핑계로 막무가내식 진압(2.22)

3. '테러방지법안, 여야 간 이견은 없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못해(2.20~22)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2.20) / 인권·사회단체 대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2.23) / 문화상 의원실, "여야 간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2.23) / 테러방지법 저지 공동투쟁, 국회 정보위에 공청회 거둬 제안(2.24~25)

4. 80년대 녹화사업의 배후는 전두환!

의문사위, "80년대 운동권 녹화사업 전두환씨 사실상 지시"(2.19) → 녹화사업 신군부 집권 전부터 계획(2.20) → 83년 의문사한 이윤성 씨 녹화사업 중 사망 밝혀(2.21) / 국회 법사위 간사단회의, 의문사법 개정안 2월 내 상정 않기로(2.21) / 유가족, 법사위 여야 간사 면담 법개정 촉구(2.23) / 이창복 의원실, '개정안, 법사위에 일단 상정한다'(2.25)

5. 기탁 :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제도 운영 발표(2.23) / 철도, 발전 노조, 공기업 사유화 반대해 파업(2.25)

◎ 중요판결·결정 및 통계

수원지법, 3살 여아 성추행 피해 증언 인정(2.20) / "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해(2.20) /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 비정규직 규모논란, 노동부 3백60만2천명(전체 임금노동자의 27.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백40만(55.7%) / 통계청, 실업률 4개월째 상승...1월 20대 7.9%, 30대 3.1% / 통계청,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격차 더 커져...지니계수 0.319(2000년 0.31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7일(수)
제 20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5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에 이어 26일에는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을 단행해, 정부의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방침이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연대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서 전국민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정오까지 철도·발전파업에 대한 수습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정부에 사전 경고했으나, 정부는 기간산업 사유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만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곧바로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연대파업에는 현대차노조 3만8천명, 금속노조 2만4천6백명 등 모두 13만여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22개 도시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기간산업 사유화 방침 철회 외에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도입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은 이날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3천5백여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대와 건국대로 나뉘어 발전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현장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사업장의 당장의 요구가 아닌 기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연대파업을 벌였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에 철도·발전파업에 대한 수습대책을 촉구하며, "만약 농성 중인 서울대, 건대와 명동성당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거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면 즉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무제도를 거부하는 것"인데 "민영화 철회는(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

로 규정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는 노조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6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이 이를 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지 주목된다. [범용]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회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심이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알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대한변협·국가인권위의 의견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홈페이지(<http://www.sarangbang.or.kr/kr/terror>)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최근 소식을 빨리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1. 테러방지법안 (2001.11)
-국정원 입법 예고안과 수정안/ -차관회의 가결안/ -국무회의 의결 최종본
2.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 (2001.11)
-입법 반대 관련 청원(청원자 서준식, 소개의원 김홍신)
-국회의원 의견표명 촉구서/ -사회단체 성명서/ 입법반대 진정서
3.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2001.11~2002.2)
-사회단체 의견서/ -대한변협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위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은아)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마닐라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쓰레기산'은 필리핀 가난의 상징이다. 마닐라 곳곳의 도시에서 모여드는 쓰레기로 산이 만들어진 빠야타스에는 쓰레기를 뒤져 폐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000년 여름, 많은 비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났는데 빠야타스는 그 일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빠야타스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미카엘 신부는 "사고 이후 정부가 쓰레기 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찾아 다시 쓰레기산 밑으로 집을 옮기고 있다"며, 여전히 7만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쓰레기산 주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 속의 삶

지난 달 23일에 방문한 빠야타스의 한 집은 쓰레기 차가 오가는 큰 도로 변에 있었다. 도로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쓰레기가 쌓인 커다랗고 평평한 돌이었다. 방문했던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있었는데 빠야타스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저축의 일종이라고 미카엘 신부는 설명했다. 1kg에 4페소(약 100원)하는 폐지나 철사, 구리 등을 모아서 전자제품과 귀금속을 사 모으는 이들은 집안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전자제품과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긴다는 것이다. 쓰레기장 곳곳에는 고무호스를 불에 태우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검은 연기를 피하기 위해 끝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아이들은 더운 날씨에도 눈만 내놓은 채, 불을 피우며 고무호스 안쪽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모으고 있었다. 마을병원 자원활동가는 이 지역에 결핵과 간염, 피부병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미카엘 신부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곳에서 3명이 살해됐지만 피해자만 있을 뿐 그것으로 그만"이라며 빠야타스의 또 다른 문제를 풀어냈다. 그는 "가족이 죽어도 장례 치를 비용도 없

는 사람들은 사고를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부정부패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체념이 이들을 자포자기하게 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빠야타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땅이다. 직업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쓰레기 산에 비정규학교와 유치원을 만들고, 공동작업 공간을 만들어 가내수공업용을 하며 돈을 모아 집을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곳에 있는 것이다. 많은 민간단체와 정치조직, 종교단체들이 빠야타스에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저축모임, 교육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비록 2000년에 있었던 붕괴사고 이후, 자기 선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방문과 경제적 지원을 찾아 줄을 서는 주민들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빠야타스는 아직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 있는 곳이었다.

빈곤보다 무서운 전쟁

필리핀 전체 쌀 생산량의 40%, 옥수수 60%, 파인애플과 천연고무 90% 이상이 생산되는 곳 민다나오. 그러나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 또 하나의 빈곤의 상징,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다. 난민을 위한 종교단체인 ECDFC에서 알리고 있는 율은 "대부분의 농가가 농사지를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루 50페소(1300원) 정도의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민다나오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나이 어린 아이들도 광산 일과 운송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거리에는 9-10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개조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민다나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힘든 노동과

굶주림이 아니라 정부군과 필리핀 이슬람혁명전선(MILF)과의 전쟁이었다.

올 2월 8일 민다나오의 서쪽 코파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시내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서너 채의 집은 부서진 채 기둥만 남아 있었다. ECDFC의 루즈는 "두 달 전에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으로 파괴된 집"이라며 흔적만 남아 있는 집들을 가리켰다. 이처럼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민다나오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은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코파바도 시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평화구역'을 만들어 정부군과 필리핀이슬람혁명전선이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 1년 전부터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평화지역에서 살도록 하는 한편, 해외지원을 얻어 기초생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화지역을 맡고 있는 로베르토 신부는 평화지역의 사례는 민다나오에서 성공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직은 하나뿐인 예에 불과하다"며, 민다나오에서 계속되는 전쟁위험을 이야기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이슬람 반정부군과 정부군을 마다하지 않고 민다나오를 찾아오는 인권운동가들은 전쟁의 위협과 굶주림 속에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산 속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산에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과 교육을 위해 쓰레기 산에 사는 활동가들 역시 작지만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힘겨운 그들의 싸움이 결실을 맺어갈 길 기대한다.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2월 28일(목)
제 20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파업 3일째인 27일 아침 철도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 후 파업을 마무리한 한편, 발전산업노조는 “매각 방침 철회 때까지 파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농성장인 서울대를 나온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흩어져서 27일에도 계속 파업을 이어나갔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 지도부는 “애초 파업에 참가했던 5천4백여 명의 노동자들(참가율 95%) 중 거의 이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노·사·정 간의 교섭은 진행됐으나, 노조는 “사측과 정부의 교섭 태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

다. 즉,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임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건국대에서 조합원들에게 특별단체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1주야 2교대근무제를 3주 2교대근무제로 변경하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 시행 등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의 오건호 정책부장은 “수십년 간 어용의 굴레를 벗어나 강한 결속력을 보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발전산업의 구성은? =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 ▲매각 대상은? =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데, 실사가 진행되면 7~8조 가량 될 거다. 우리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인수할 능력이 없다. 현재까지 공청회 등에 참석해 관심을 보인 외국기업은 웨스턴하우스, 제네럴 일렉트릭, ABB, 미란트 등이다.
- ▲재무상태가 나쁜가? = 평균적으로 5~6백억의 순이익을 봤다. 적자 상태인 2개 사는 분할 당시 안고 나온 한국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대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윤을 뽑을 수 없는 설비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전력공급 부족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또 구조개편 이후 바로 사기업에 발전산업을 매각한 영국의 경우 98년도 83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이머 단체행동에 성공했다는 데 우선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으로 민영화에 대해 일단 방패 역할을 해냈지만, 합의문에서 ‘공공적 발전’의 실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주영]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대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통감”하는 뜻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준비된 이 법조인 선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117명이 동참했다.

법조인들은 이 선언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인들은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정당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교정당국이 고인과 유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유혜정]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며 지원 규모도 들쭉날쭉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따라 2000년 1만5천명, 2001년 1만3천명의 아동에 대해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가정의 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한 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심 식사 지원 아동은 약 16만 4천명으로 이는 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보건복지부의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다. 교육부 조혜영 사무관은 "담당교사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거나 급식비 장기 미납학생 등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교육부 역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정부의 결식아동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부스리기선교회는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차상위 계급을 포함한 빈곤인구를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보는데, 결식아동 역시 전체 아동인구(1천2백만명)의 10% 내외(1백2십만명)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동은 전체 아동의 0.1%수준에 그치고, 교육부의 지원도 2%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부스리기선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4월 결식아동 지정과정에서 △누나가 밥을 해 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경우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할머니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기피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조사기간이 1주일로 한정돼, 담당자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의 아동명단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

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임아무개 교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예산이 정해져 있거나 교장선생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부스리기 선교회가 빈민지역의 공부방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약아동인 1천2백38명중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644명인 52%에 그쳤다. 40%가 넘는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결식지원사업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부스리기 선교회의 서인영 씨는 "결식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식사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양, 주거, 환경,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도 예방적인 복지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보영]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정의 배수진을 친 것.

27일 계승연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4시 의문사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사권한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사무국장은 "의문사는 당시 공안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시 대공분실, 기무사, 안기부 등의 관련자료가 2·3급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진상규명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의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창복 의원은 여기서 유가족 쪽의 수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 중 조사기간 연장 조항만을 받아들여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의문사법 개정을 둘러싼 법사위의 논의가 주목된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002년 3월

(제2042호 ~ 제2062호)